

17th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2023.05.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행사일정

1 부 : 대학과 통일

14:00 ~
15:40

라운드테이블

| 사회 |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패널 | 장달중, 정근식, 김병연 (이상 前 통일평화연구원장), 천해성 (前 통일부차관)

휴식

2 부 : 통일학의 국제화

16:00 ~
18:00

| 사회 | 이정철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발표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토론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시대 북한학의 방법과 과제”

발표

강진웅 (경기대학교)

토론

임수진 (통일평화연구원)

“한중관계의 지정학: 한미동맹에 대한
합의를 중심으로”

발표

이지영 (American Univ.)

토론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목 차

01 대학과 통일 (사회: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01

- 라운드 테이블 장달중, 정근식, 김병연(이상 前 통일평화연구원장) 03
천해성(前 통일부 차관)

02 통일학의 국제화 (사회: 이정철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09

- 1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발표: 차태서(성균관대학교) 11
토론: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 41
- 2 통일시대 북한학의 방법과 과제
발표: 강진웅(경기대학교) 45
토론: 임수진(통일평화연구원) 55
- 3 한중관계의 지정학: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발표: 이지영(American Univ) 61
토론: 마상윤(가톨릭대학교) 73



1부

대학과 통일

| 사회 |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라운드 테이블 |

장달중, 정근식, 김병연(이상 前 통일평화연구원장), 천해성(前 통일부 차관)

The image features a light gray background with a network of thin, light gray lines. Small, semi-transparent dots in various colors (pink, teal, orange, and red) are placed at the intersections of these lines, creating a sparse, geometric pattern. The lines form irregular polygons and paths across the page.

memo.

An abstract geometric pattern consisting of thin, light gray lines forming a network of irregular polygons. Small, solid-colored dots in shades of pink, teal, orange, and red are placed at various vertices of the network. The pattern is sparse and occupies the top and bottom edges of the page, leaving a large white central area.

memo.

The image features a light gray background with a network of thin, light gray lines. These lines connect various small, colored dots scattered across the page. The dots are in shades of pink, teal, orange, and red. The overall effect is that of a complex, interconnected web or a stylized map. The word "memo." is written in a dark purple, sans-serif font in the upper left quadrant.

memo.



2부

통일학의 국제화

| 사회 | 이정철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1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발표: 차태서(성균관대학교)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차 태 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I. 서론: 탈냉전 30년 대북정책의 실패
- II. “신냉전” 시대 북핵문제의 성격전환: 자유세계질서 외부의 “깡패 국가” 이슈에서 “다극세계”에서의 지정학 게임으로
- III.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전략 전환과 “군비통제론”의 대두
- IV. “Winter is coming”: 탈단극시대 대북정책의 현실주의적 전환

주제어: 탈단극 시대, 북핵문제, 군비통제론, 현실주의

국문초록

오늘날 다극화라는 지정학적 격변은 한반도 문제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극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패권경쟁의 환경 속에서 북한문제의 본질이 재정의되고 있는 역사적 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북한은 “신냉전”의 도래를 새로운 전략적 기회로 여기고 주동적으로 새로운 국가 대전략을 모색 중이며, 남한 역시도 과거 자유세계질서를 토대로 한 기성 안보전략과 완전히 구별되는 대북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하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문제의식이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후의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탈냉전 기간 공론장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I. 서론: 탈냉전 30년 대북정책의 실패

지난 30여 년간 유일 패권 질서를 이끌어온 워싱턴에서부터 탈냉전기의 완전한 종언이 선포되고, 강대국들은 그 이후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다.¹⁾ 2008년 전지구적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장기적인 미중 전략경쟁이 목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다극 체제 형성의 가능성마저 암시하고 있다.²⁾ 따라서, 기존 지구질서가 침식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연쇄고리들이 작동하기 시작하였고,³⁾ 그러한 지정학적 격변은 한반도 문제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극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패권경쟁의 환경 속에서 북한문제의 본질이 재정의되고 있는 역사적 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평양은 다극화와 신냉전의 도래를 새로운 전략적 기회로 여기고 주동적으로 새로운 국가 대전략을 모색 중이며, 서울 역시도 과거 자유세계질서를 토대로 한 기성 안보전략과 완전히 구별되는 대북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하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⁴⁾

통념적 인식과 달리 탈냉전 기간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권에서 추구한 대북정책의 목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동일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통일, 더 정확히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진보진영의 “햇볕정책”조차 보수진영과 구체적 방법론에서 몇 가지 대립각은 세웠지만 이 두 가지 최종목표는 공유했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공세적인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경제 제재와 군사적 강압을 배합해 김씨 정권의 자체 붕괴 혹은 외부로부터의 정권교체를 추구했다면, 진보는 개성공단 사례가 대표하듯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북한에 시장 메커니즘을 밀어 넣으려 했다. 어쨌든 북한은 햇볕을 짝 옷을 벗겨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⁵⁾ 그러나 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⁶⁾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국제질서의 규범을 어긴 “강패 국가(rogue state)” 혹은 “악의 축(axis of evil)”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실패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산

1)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p.6.

2)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질서,”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차태서, “탈단극적 계기로의 진입? 포스트-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세계질서의 대전환 읽기,”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3) David Ignatius, “Japan Is Reacting to Russia and China Rationally. It Is Only the Beginning,”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2,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3/01/12/russia-china-threat-japan-military>

4) 황지환, “북한의 신냉전 인식과 한국의 대외전략,” 『Global NK 논평』, 2023년 4월 5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812&board=kor_issuebriefing

5)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5호 (한국정치학회, 2005).

6) 일례로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국제정치 분야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1%는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30년 안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5.1%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중앙일보』, “전문가 55% ‘30년내 북핵 해결 불가’… 자체 핵보유 62% 반대,” 2023년 3월 24일.

(asymmetric escalation)”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 지사가 돼 버렸다.⁷⁾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문제의식이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후의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탈냉전 기간 공론장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arms control)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의도된 계획이든, 인간적 실수에 의한 것이든)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⁸⁾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차디찬 겨울의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가 엄혹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주장이다.

II. “신냉전” 시대 북핵문제의 성격전환: 자유세계질서 외부의 “깡패 국가” 이슈에서 “다극세계”에서의 지정학 게임으로

지난 탈냉전기 북한문제는 미국 주도 자유세계질서에 대항하는 전형적인 “깡패 국가”의 문제로 규정되었다.⁹⁾ 즉, 북한은 미국이 건설한 국제사회의 주요한 규범-민주주의와 인권, 핵확산금지 등-을 어긴 문명 세계의 외부자(pariah)로 정의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관계에 존재하는 안보 딜레마의 상호성은 기본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자유세계질서의 규칙을 위반한 북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시각으로 자리 잡았기에 평양 정권은 정당성을 지닌

7) 미 국가정보국(DNI)의 『2023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덕분에 호의적으로 변한 국제 환경, 독재통치의 궁극적 보장자로서 핵무기의 의미 부여 등으로 인해 향후 비핵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ebruary 6, 2023, <https://www.dni.gov/files/ODNI/documents/assessments/ATA-2023-Unclassified-Report.pdf>

8)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 2018년 3월 21일, https://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7973

9) Joel S. Wit, “North Korea: The Leader of the Pack,”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4, No. 1 (2001).

외교 파트너로도 간주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북미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닌 경제적 제재,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는 정권교체(regime change) 등의 일방적 응징방식이 우선되었다.¹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 개입주의 프로젝트는 현재 시점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정권은 여전히 견재하며, 비핵화가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후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오늘날 세계정세가 패권 이행기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북핵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이런 새로운 환경 조건에 맞춰 자신의 강대국 외교전략을 전환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요약하면, 다극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북핵문제의 본질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나 NPT 체제수호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안보규범의 이슈에서 미중(러)간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일환으로 변경되고 있다.¹¹⁾ 2010년대 이래 중국의 부상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학에 있어서도 북미 양자관계의 틀을 넘어 북미중(러)의 다자관계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북한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 과거 중소분쟁기의 “등거리 외교” 경험을 역사적 준거로 삼아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 정권은 단극체제 30년간의 “대미 갈등적 편승외교”에서 벗어나 북수열강간의 “복합적 전략게임”에 대응하는 “시계추 외교”의 복원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¹²⁾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최근 2년간 안보리에서 나타난 일련의 새로운 현상은 북핵문제 성격전환의 뚜렷한 징후이다. 주지하다시피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행정부 시기 양자 협상국면에서 스스로 부과했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다종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였으며,¹³⁾ 급기야 동년 11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이 탄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도출되기는 커녕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간단한 규탄 성명조차 통과되지 못한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는 2006-2017년 기간 10개의 주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통과될 때 두 강대국도 찬성표를 던지며 대북 제재 레짐을 함께 구축해왔음을 고려해볼 때, 매우 이례적인 사태의 전변이다. 2023년에 들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북한의 연이은 ICBM 도발¹⁴⁾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반복해 소집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 발

10) Roland Bleiker, *Divided Korea: Toward a Culture of Reconcili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11) 이우탁,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제2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12) 임수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적 국가행동에서 중국 및 미·중관계 변수: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김용호 외,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 대외행동의 특징과 유형』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pp. 165-166. 북한의 강대국 외교사를 살펴보면 이미 냉전기부터 평양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에서 현실주의적 “균형외교”를 추구한 경험이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자주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미중경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에 투영되어 있다. 김갑식·신종호,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신종호 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388-404. 2016년경부터 북한은 소위 “전략적 요충지론”을 제시해 왔는데,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새로운 조건에서 “조선 반도의 지정학적宿命론은 이미 과거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이 주도권 쟁탈을 위한 대국들의 경쟁 무대가 됨으로써 그 북반 위의 노른자위를 타고 앉아 있는 조선 반도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정학적 행운”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김갑식·신종호 (2022), p. 397n523에서 재인용.

13)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총 8차례의 ICBM 발사를 포함해 30여 차례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14) 북한은 2023년 들어 4월 현재까지 ICBM 3발 등 총 9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합리적 우려”에 따른 맞대응일 뿐이라는 북한측 입장을 옹호하면서 도리어 대북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이에 서방측이 장외에 따로 모여 규탄성명만을 낭독하는 무기력한 대응이 반복되었다.¹⁵⁾ 이러한 전체적 양상은 결국 전후 미국주도 자유세계질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안보영역에서의 비확산규범이 깨져나가고, 규범 위반자에 대한 제재 레짐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강대국간 경쟁논리가 북핵문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새로운 동학이 출현했음을 고지한 것이다.¹⁶⁾

다음으로 북한 역시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이 도래했다는 인식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재규정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엿보고 있다.¹⁷⁾ 가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¹⁸⁾이라고 지적하거나,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뜨리게 가속화되고 있음”¹⁹⁾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차원을 넘어 지역의 군사적 균형 변화에 따른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냉전 구도와 다극 체제 부상에 대한 담론자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국면부터 평양의 관영매체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국제구조변동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대 들어서의 새로운 현상이다.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국제질서의 다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²⁰⁾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은 북한입장에서는 대외환경 개선의 창이 열린 것이자 경제·핵 병진노선을 밀고 나갈 기회라고 인식된 듯하다. 환언하면, 2020년대 초의 세계사적 국면은 북한의 전략적 노선이 전반적으로 재정의되는 계기가 되었다.²¹⁾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다극 시대 출현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으로서 인태 지역내 동맹 네트워크 형성의 흐름을 주시²²⁾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미국-일본” 삼각협력의 강화가

15) 『뉴스1』, “北 대놓고 ICBM 쏘는데… 안보리는 1년째 ‘빈손’,” 2023년 4월 18일.

16) Andrew Yeo, “Why Furt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uld Be Tough to Add,” *The Washington Post*, July 5,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07/05/north-korea-sanctions-weapons-unscc-security-council-veto-russia-china/>. 이런 맥락에서 2023년 3월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 문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은 북한 측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화답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재와 압박은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의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였다. 『뉴시스』, “[중러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中 9600자, 英 4만3000자로 ‘반미연대’,” 2023년 3월 22일.

17) *New York Times*, “North Korea Sees New Opportunities in ‘Neo-Cold War’,” November 13, 2022, <https://www.nytimes.com/2022/11/13/world/asia/north-korea-missile-tests.html>

18)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http://www.jajusibo.com/57083>

19)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http://www.jajusibo.com/60458>

20) 박원근,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Global NK 논평』, 2023년 3월 9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750&board=kor_issuebriefing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장세호,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Global NK 논평』, 2023년 3월 23일,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758&board=kor_issuebriefing

21) 구갑우,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과 대외정책,” 김상기 외,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72.

22)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 남조선과의 3각공조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뿔력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있다.” 김정은,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새로운 “북한-중국-러시아” 연대증진의 논리적 발판구실을 하고 있다. 즉, 탈냉전 30년이라는 현상유지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새로운 세계질서 구성을 위해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국가간의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그간 단극체제에서 고립되었던 자신의 처지를 타개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고립문제를 해결한다는 북한의 일관된 탈냉전기 강대국 전략의 폐기를 의미한다.²³⁾ 이러한 전환적 선택은 더 이상 단극체제가 아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팩스 아메리카나에서 북한의 생존과 번영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투자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다극화된 세계가 출현한다면 꼭 그러한 옵션만이 절대적이지 않게 된다. 미국 대신 권위주의 강대국들과의 제휴를 통해 안보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활로를 타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특히 평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러 양자관계의 밀착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²⁵⁾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소집된 유엔총회 긴급특별세션에서 북한은 전쟁의 책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과 같은 미국의 패권적 정책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대해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 등과 함께 반대하였다. 이는 기권을 선택한 중국, 인도, 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 쿠바 등에 비해 훨씬 선명한 친러입장의 표명이었다.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2022년 7월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 수립된 괴뢰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주권국으로 승인하였고,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단교로 이어졌다.²⁶⁾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직접 2023년 1월 담화를 통해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전호에서 있을 것”이

여.” 『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1일, <http://www.jajusibo.com/61380>
23) Mike Chinoy, “Kim Jong Un Is Putin’s and Xi’s New Best Friend,” *Foreign Policy*, September 12,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09/12/north-korea-russia-china-partnership-putin-xi-kim/>

24)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이러한 강대국 정책의 전환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나 편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한 대외종속의 길은 냉전시절부터 유지해온 “주체”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신냉전”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중관계의 이중성”-소위 혈맹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국내 영향력 확대를 체제 불안의 핵심요소로 간주하는 북한의 기본인식-에 대한 독해를 요청한다. 김태주·양갑용, “미중 전략경쟁 시기 북중관계의 이중성: 중국은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INSS 전략보고』, 209호, 2023년 1월 27일,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301/F20230127091014306.pdf> 가령,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의 회고에 따르면, 2018년 3월 북한 방문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의 철수를 필요로 한다고 발언했다. 『조선비즈』, “폼페이오 ‘김정은, 주한미군 원했다… 中 공산당 위협 타,’” 2023년 1월 25일. 이와 같이 북중미 삼각관계에서 평양 수뇌부가 지닌 양가적 태도는 사실 꽤 긴 연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조건만 맞으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내비친 전력이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당시 외무성 부상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에게 미국이 제한적 핵무장을 용인하고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준다면 북한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협조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하였다. 이우탁 (2022), p. 193. 결국 북한은 미중러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와 자율성을 높이는 “시계추 외교” 혹은 “이중 해징”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황일도, “최근 북한의 중장기 국가비전 언급: 대외-경제정책과의 연관성,”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37호, 2022년 12월 5일,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47XlHzmKcs7MGxBuKKNtino-.public22?stor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21393675086327148&fileSn=1>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pp. 17-21.

25) Yong-Chool Ha and Beom-Shik Shin, “The Impact of the Ukraine War o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Asian Survey*, Vol. 62, No. 5-6 (2022).

26) 최재덕,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연대의 심화: 미-중-러의 지정학적 대결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소연구』 제46권 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 p. 205; 구갑우 (2022), p. 69.

라고 못 박음으로써, 우크라이나전 이후 진영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에서 북한이 어느 편에 자리잡고 있는지를 명확히 한 사실이다.²⁷⁾ 또한 북한은 보다 실질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포탄과 탄약, 미사일 등을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과 제3국 무기상 등을 통해 공급해왔거나 추가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²⁸⁾

Ⅲ.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전략 전환과 “군비통제론”의 대두

1. 탈냉전기 북한 대전략의 궤적: “편승”과 “균형” 사이의 갈림길

이처럼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사업원칙”의 패러다임도 전환중이다.²⁹⁾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핵능력과 중장기 국가비전 측면에 있어 과거 탈냉전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를 기점으로 핵전력 고도화의 “새로운 길”에 일로매진하고 있는 북한, 제재 해제를 위한 북미 비핵화 협상 대신 북중러 삼각연합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입지를 다지며 자력갱생을 시도하는 “정면돌파전” 시대의 북한이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³⁰⁾ 기실 공산권 붕괴 후 고립무원의 절체절명적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적, 경제적 생존 그 자체를 도모하는 것이 북한 국가전략의 대전제였으며, 핵과 자력갱생은 줄곧 그 전략목표 실현의 핵심적 수단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대략 세 차례 정도의 패러다임 변동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김일성-김정일 집권기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노선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비대칭적 포위상태를 해소하고 한반도상의 진정한 탈냉전을 달성하는 것(“편승”)을 목표로 하였다. 이 시점에서 핵개발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담판-핵능력과 관계 정상화의 교환-을 위한 협상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실제 워싱턴과의 교섭을 통해 얻어낸 제네바 기본합의서(1994), 북미 공동 코뮤니케(2000), 9.19 공동성명(2005) 등에는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³¹⁾ 그러나 2013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선포된 김정은 시대의 이른바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일정한 국가전략의 단절을 가져왔다. 즉, 더 이상 교환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 핵무기를 실제적으로 보유하여 힘(혹은 공포)의 “균형”을 통해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였다.³²⁾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에 대한 2차 공격능력(=확증파괴 능

27) 김여정,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27일. <http://www.jajusibo.com/61575> 또한 동년 4월 담화에서도 김 부부장은 “눈만 뜨면 상전을 쳐다보고 입만 벌리면 구걸과 청탁의 염불을 외우는 젤렌스키 당국은 애당초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지금처럼 핵 망상에 집념하다가 오히려 러시아의 핵 조준권 안에서 보다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침략을 당한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여정, “무모한 핵망상은 자멸을 부른다,”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1일, <http://www.jajusibo.com/62207>

28) 『중앙일보』, “美 ‘러, 식량 제공 대가로 북한서 탄약 추가확보 모색,’” 2023년 3월 31일.

29) 김정은 (2023. 1. 1.).

30) 정육식, “북한이 크게 달라졌다.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황해문화』 117호 (새얼문화재단, 2022); 황일도 (2022).

31) 안경모,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한국정치연구』 제32집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p. 171.

력)까지 갖추는 것은 북한의 경제력상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때의 “균형”은 최소 억지력 확보 수준을 의미했을 것이며, 미국 본토에 대한 응징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탑재한 ICBM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³²⁾

그런데 2017년 드디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평양이 2018년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중장기 국가비전에서 또다시 “편승”으로의 패러다임 변동이 발생했다.³⁴⁾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다고 선언했다.³⁵⁾ 이로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회담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 혹은-김여정 부부장의 회고적 표현을 빌자면-“일대 모험”³⁶⁾을 시도하는 국면이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극적인 대전략 변화³⁷⁾에는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 성공이라는 물질 토대에 기반한 자신감과 함께 유별나게 북미 양자협상에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의 존재 등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9년 이후 다시 한번 북한의 국가전략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60여 시간의 기차여행을 감수하며 베트남까지 이동한 북한 수뇌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태 일 수밖에 없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평양은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접고 “자력갱생”과 “핵보유”를 추구하는 과거의 “병진노선”을 재등장시켰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회귀가 아닌 국가전략의 전방위적인 “급진화”를 의미했다.³⁸⁾ 주지하다시피 김정은은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대미편승노선을 폐기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정한 암증모색기를 거쳤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존속하던 기간에는 여전히 협상 가능성에 미련을 보였으며, 2019년 4월까지만 해도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³⁹⁾ 그러나 뒤이어 깜작

32) 안경모 (2023), p. 173.

33) 황일도,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IFANS 정책연구시리즈』, 2022-05, 2023년 1월 6일,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GnQUmMgmH6YSwShrg4kfjt0Z.public21?stor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24180965258299262&fileSn=1>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p. 11.

34) 안경모 (2023), p. 174.

35) 김정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8년 4월 21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07>

36) 2020년 10월, 북미정상회담의 재개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담화에서 김여정은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국면을 언급하며,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회고하였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년 7월 10일, <http://www.jajusibo.com/51502>

37) 실제 2018년 국면에서 북한 수뇌부가 어느 정도의 범위와 심도까지 국가전략의 전환을 구상했는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한쪽 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복해 강조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비핵화를 실제로 결심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반면, 정반대로 김정은 집권 기간 내내 북한의 전략은 핵보유와 대미균형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추구했다는 반론이 다른 쪽 끝에 존재한다. 박원근,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한국국가전략』 제19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38) 박원근, “급진화한 북한 다루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와 윤석열 정부의 숙제,” 『Global NK 논평』, 2022년 5월 6일, <https://www.eai.or.kr/new/ko/project/view.asp?intSeq=21244&code=98>

39)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이벤트처럼 벌어진 판문점에서의 6월 상봉 이후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정은은 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지를 따지며 실망감을 표현하였고, 동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회담에서도 제재 완화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지속되면서 결국 북미간의 협상국면은 종식되고 말았다.⁴⁰⁾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온 것이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의 이른바 “정면돌파전” 선언이다. 여기서 김정은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진단하고, 대안으로써 자력갱생과 함께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였다.⁴¹⁾ 결국 북미 담판을 통한 관계 정상화와 제재 완화의 길을 포기하고 경제와 안보상의 자구(self-help)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전략을 재선회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후 그나마 일말의 협상재개 가능성을 기대하며 “러브레터”를 주고 받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강패 국가”를 응징하는 전통적인 대북정책노선-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회귀한 조 바이든(Joe Biden) 정권이 등장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서 설명했듯 북미 양자간 게임을 다자간 강대국 정치 게임으로 변화시키며 북한의 “균형” 대전략 채택에 우호적인 대외정세를 조성하였다. 그 와중에 김정은 정권은 “백두산 군마행군” 등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통해 “백두산 정신”을 강조하는 등 “정면돌파전” 수행을 위한 내부 정비 기간을 거친 후,⁴²⁾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시선에서 대전략의 전환-“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하 부국강병 추구”-을 완수해 갔다.⁴³⁾

2. 공세적 핵 독트린의 등장: “비대칭 확전” 교리의 채택

이러한 대전략 패러다임의 변동은 특히 북한의 핵무력과 관련해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과거 중국식의 최소역지 독트린⁴⁴⁾을 넘어서 역내에서 실전 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핵무기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교리 변화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핵무기 체계의 다종다양화 및 대량생산이 본격적으로 추구되었다. 핵무기 전력구조라는 하드웨어와 함께 독트린, 태세, 지휘통제 같은 소프트웨어에서도 급속한 진화가 발생 중인 셈이다. 다시 말해, 핵무력 정책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실제 무기체계를 실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 목표물 설정 및 작전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 실전 가상훈련을 실행하고 있는 단계에 다다른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⁴⁵⁾ 이 때문에 2010년대까지 북한 핵에 대한 학계 및 정

2019년 4월 13일, <http://www.jajusibo.com/45000>

40) 정옥식 (2022), pp. 244-246.

41) 김정은, “조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101000066>

42) 『UPI뉴스』, “김정은 12월 군마행군 이후 ‘5만 명 백두산 답사행군’,” 2020년 2월 13일.

43) 안경모 (2023), pp. 183-187.

44) 핵선제불사용(no first-use) 선언을 통해 핵무기 사용목표를 보복공격으로 제한함으로써, 핵전력 수준도 최소한의 2차 공격력을 유지하는 선에 맞게 제한하는 핵 독트린이다. Andrew Futter, 고봉준 역, 『핵무기의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6), pp. 161-164.

45) 황일도 (2023), p. 3. 반대로 북한 핵독트린의 서사와 실제 핵능력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심대하기에 현재 평양의 행태는 일종의 허장성세에 가깝다는 시선으로는 양육,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도발의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2-30호. 2022년 12월 21일, <https://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86296> (검색

책 써클의 논의가 주로 미국본토 보복타격능력 확보여부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저위력 핵 무기 개발과 핵 선제사용 가능성으로 급격히 초점이 이동 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파키스탄, 러시아 등과 같이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거부하면서 실질적 핵사용을 고려하고, “비대칭 확산”⁴⁶⁾ 교리와 태세를 지닌 사례들과 북한의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⁴⁷⁾ 이와 같은 사태의 전개 양상 또한 북핵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시하며, 따라서 우리의 대북 시각과 접근법도 큰 전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의 핵무력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김정은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와 “전술무기화”를 비롯해 5대 전략무기의 개발계획⁴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핵 실전 전력화의 행보를 예고한 것이었다.⁴⁹⁾ 즉, 핵무기를 최후의 응징보복용으로 사용한다는 기성 교리에서 탈피하여,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재래식 전투에서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 전환이 발생했다.⁵⁰⁾ 그리고 2022년 1월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⁵¹⁾를 하달함으로써,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국면 동안 스스로 부과했던 모라토리엄의 해제를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2년부터 ICBM을 포함해 다종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연달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시기 공약한 약속들에 구애받음 없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공세적 시간표의 존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새로운 핵교리에 걸맞게 개발된 신형무기들에 대한 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행사에서 김정은은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

알: 2023년 4월 20일) 참조.

46) 비핀 나랑(Vipin Narang)의 지역 핵강국 핵전략의 분류법에 따르면 “비대칭 확산”이란, 믿을만한 후원 핵강대국이 없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적국과 직면한 경우 중소핵무장국이 선택하는 핵교리이다. 이는 강력한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상대의 소규모 재래식 공격에도 즉각적인 핵보복을 위협하는 전략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과 핵 선제사용(first use)을 불사한다는 점에서 여타 “촉매(catalytic)” 전략이나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전략에 비해 훨씬 공세적이고 위협스러운 doktrin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이 신뢰할만한 동맹국인지 의심스럽고 한미동맹의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비대칭 확산 교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1 (2015), pp. 78-79; 81-85; 전봉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8호, 2022년 10월 24일,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SX4d1eO6hi0+KyH9725YGTcq.public21?storgel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17785781352337074&fileSn=1>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pp. 11-12.

47) 김진아, “북한의 핵태세 변화: 전략적 안정성 측면의 시사점,” 『북한 NPT 탈퇴 선언 30년 특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3), p. 109.

48) 나머지 4대 무기는 ①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및 극초음속 활공비행 핵탄두 완성, ② 1만5000km 사정권 내 타격 정확도 제고, ③ 정찰 탐지 수단, 군사 정찰위성, ④ 핵잠수함과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등이다.

49) 김정은,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54088§ion=sc61

50) 황일도 (2023), p. 11.

51)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로동신문』, 2022년 1월 20일, <http://minzokilbo.com/wp/?p=144663>

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⁵²⁾ 이는 2013년 핵보유국법에서 밝혔던 전쟁억제와 응징보복을 위한 핵사용 원칙⁵³⁾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 즉, 선제타격이라는 “돌짜가는 사명”의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었다.⁵⁴⁾ 그리고 마침내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는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⁵⁵⁾를 채택하여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비대칭 확전” 전략을 암시하는 공세적 핵 독트린을 대내외에 천명하기에 이르렀다.⁵⁶⁾ 법령의 문구와 개념은 북한의 핵 실전 전력화 교리가 지향하는 극단적 불확실성을 과시하였다.⁵⁷⁾ 가령, 핵무력의 사명을 다룬 법령 1조에서 전쟁억제라는 “기본사명”이 실패할 경우 “전쟁의 결정적 승리” 달성을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핵무기의 실전 전력화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핵무기의 사용조건을 규정한 6조였는데, 1-3항에서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반복 서술됨으로써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암시되었고, 핵무기 사용의 유일 목적(sole purpose)과 관련해서도 핵전뿐만 아니라 재래전에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4항(“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을 통해 개방되었다. 또한 5항(“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의 내용은 아무런 구체성이 없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불가피한데, 이는 핵무기 사용조건 판단의 자의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북한이 왜 “비대칭 확전” 혹은 “점감을 위한 확전(escalate-to-deescalate)” 교리를 공식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의 2차 공격력을 인정치 않고 여차하면 선제공격을 통해 모든 핵탄두의 제거를 노리는 조건 때문에, 북한이 매우 공세적인 핵교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⁵⁸⁾ 이는 적대국에 비해

52) 김정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22년 4월 25일, <http://www.jajusibo.com/59369>

53) 2013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입법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핵무기의 용도를 한정하였다. 『민족일보』, “북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국가우주개발국’ 등,” 2013년 4월 2일.

54) 같은 맥락에서 김여정은 앞서 2022년 4월 4일 담화를 통해 “핵무력의 사명은 우선 그런 전쟁에 말려들지 않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단 전쟁상황에서라면 그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바뀐다”면서 “전쟁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여정,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2년 4월 4일.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72> 김정은 또한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고에서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김정은 (2023. 1. 1.).

55) 『자주시보』, “북, ‘선제 핵공격’ 명시한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2022년 9월 9일.

56) 김보미, “북한의 새로운 핵독트린: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분석,” 『INSS 이슈브리프』, 387호, 2022년 9월 13일,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496&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57) 황일도 (2023), p. 12.

58) 전재성, “한반도 정전체제와 북핵체제를 넘어: 불안전 주권성의 전개와 극복,” 『한국과 국제정치』 제 39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p. 70. 이는 핵 억제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취약성

전략적 열세에 처했던 1960년대 NATO, 2010년대 이후의 파키스탄, 최근의 러시아 등이 모두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⁵⁹⁾ 이러한 핵 독트린의 핵심은 핵사용 임계점(threshold)을 의도적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재래식 전장도 전술핵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상대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조기에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⁰⁾ 종합하면, 북한은 제한 핵전쟁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통해 체제 보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최후의 전략적 응징보복용이 아닌 재래식 교전의 와중에도 먼저 전술적, 작전적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⁶¹⁾ 따라서 무기 체계상으로는 재래전과 핵전쟁의 문턱을 사실상 제거할 수 있는 전술핵·단거리 전력강화로의 전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⁶²⁾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북한이 연쇄적으로 실행한 군사훈련들은 한반도에서 제한적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술핵탄두가 탑재가능한 순항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무인수중공격정 등 다양한 신 투발수단(플랫폼)을 어떤 방식-수중폭발을 통한 방사능 해일 유발, 공중폭발을 통한 살상 반경 극대화 등-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⁶³⁾ 비대칭 확산 교리의 선언단계를 넘어 실제 전력배치와 작전계획, 운용 등의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과시하는 양상이다.⁶⁴⁾ 실제 한가지 사례로서 2022년 12월 31일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식 답례연설”에서 김정은은 신형 방사포가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탄두까지 가능한것으로 하여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무기로서 적들을 압

의 골짜기(valley of vulnerability)”를 북한이 현재 통과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즉, 압도적 핵 능력을 지닌 강대국(=미국)이 이제 막 핵무력을 개발하고 있는 적국(=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국면이 현재 북미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난국 돌파를 위해서 북한은 일종의 고육책으로써 극히 자의적이고 위태로운 핵교리와 핵태세를 선택함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대한 확증보복력을 확보하여 취약성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 급진적인 핵무력 고도화-장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의 확충과 SLBM의 다량 확보 등-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황일도 (2023), pp. 21-25.

59) 황일도 (2023), p. 11.

60) 김태형, “핵무기의 국제정치 지형도,” 『국제정치논총』, 제62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p. 253. 본 교리 자체는 2020년 공개된 “핵 억제 영역의 러시아 국가정책 기본 원칙에 대하여”에 처음 명문화된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이 여의찮은 러시아 수뇌부가 반복적으로 전술 핵 사용을 협박함으로써 실제 전쟁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핵무력정책법에 적힌 북한의 신 핵교리도 상당 부분 러시아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황일도 (2023), pp. 16-20.

61) 이러한 교리 변화에 맞추어 핵전력의 지휘통제 차원에서도 초기의 “독단형” 모델(전략군사령관을 통해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모든 지휘권이 집중)에서 현장 지휘관에게 전술핵 사용의 재량을 주는 “위임형” 모델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일도 (2023), pp. 13-14. 특히 핵무력정책법 3조 3항(“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이 사전 위임형 지휘통제와 단독형 지휘통제가 함께 병행구축됨을 암시하고 있다.

62) 김보미,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INSS 전략보고』, 182호, 2022년 9월 22일,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209/F20220922081843373.pdf>

63)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최근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훈련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대한 맞대응의 형국을 보였다는 점이다. 과거 연합훈련 기간 김정은은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며 잠적을 감추는 모습이 대세였던 반면, 2022년 가을부터는 오히려 더 보란 듯이(때로 딸 김주애까지 대동하고) 북한 곳곳을 누비며 공개적으로 핵, 미사일 무기 관련 훈련을 지도하였다. 그만큼 북한정권 스스로 자신의 핵무력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전되었다고 판단하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으로 해석된다. 『SBS』, “전략폭격기엔 숨다가 항공모함엔 ‘올테면 와 봐라’는 김정은?” 2023년 4월 9일.

64) 황일도 (2023), p. 15. 또한 북한은 화성-17/18형 등 ICBM 발사도 지속 실시함으로써 기존 방식으로 대미 응징억제를 위한 미국본토 타격능력 역시 과시해왔다. 『뉴스1』, “北 김정은 ‘적들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고체연료 ICBM’ 발사 확인,” 2023년 4월 14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무기와 단거리 투발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대미위협 억제를 위해 전략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발전도 지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보미 (2022), p. 15.

도적으로 제압해야 할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⁵⁾ 이어서 2023년 2월에는 이 방사포들이 남한의 공군비행장을 전술핵탄두로 공격할 수단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미공군의 압도적 전력에 대한 비대칭전력으로 활용될 것임을 지시하였다.⁶⁶⁾ 또한 2023년 3월 말,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 사실을 알리면서 “화산-31”이라는 전술핵탄두까지 실물사진으로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⁶⁷⁾ 그 탄두가 장착되는 투발수단 8종⁶⁸⁾까지 노출하였다. 이 보도에 설명된 김정은의 “지도”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북한은 단순한 핵, 미사일 개발 수준을 넘어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을 통해 “준비된 핵반격 작전 계획과 명령서들”에 기반해 자신들의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를 연습해보는 단계에 도달하였다.⁶⁹⁾

3. 어두워진 비핵화 전망과 군비통제 접근법의 부상

물론 이상의 비대칭 확전 교리도 확보증복이나 촉매 교리 등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핵전략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여전히 김정은과 김여정이 강조하고, 핵무력정책법이 공식화한 북한 핵의 “첫째”가는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⁷⁰⁾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성격변화와 관련해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핵개발을 거래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국면은 종식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 의제 자체가 폐기됨으로써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더 이상 외교적 카드가 아닌 전력화 자체를 위한 것으로 재정의 되었으며,⁷¹⁾ 실제 남한(과 미국)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이제 북한은 기존의 “비핵화” 프레임 자체를 깨고 “군축”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²⁾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1994)⁷³⁾가 쉽사리 무효화 되는 것을 관찰한 북한은 핵무장 유지의 필요성을 더더욱 확신했을 공산이 크

65)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00mm초대형방사포 증정식에서 하신 답례연설,” 『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1일, <http://www.jajusibo.com/61381>

66) 『세계일보』, “‘비행장 파괴’ 카드로 공군력 격차 뒤집기… 핵위협 美서 南으로 이동,” 2023년 2월 21일.

67)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탄두의 소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때 사진으로 공개된 것은 실제 탄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겨레』, “권영세 ‘북한 인권은 기본 원칙… 아침으로 평화 이룰 수 없다.’,” 2023년 4월 9일.

68) 8종 투발 수단은 600mm 초대형방사포, 무인잠수정 해일, 화살-2 순항미사일, 화살-1 순항미사일, KN-24, KN-25 등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北 ‘다종무기 탑재 전술핵탄두’ 공개로 위협…직경 40~50cm 추정,” 2023년 3월 28일.

69)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년 3월 28일, <http://www.jajusibo.com/62162>

70) 정반대로 나랑 등이 정초한 “태세 최적화 이론”의 현상유지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수정주의 국가로 파악되는 북한의 핵교리는 한반도의 현상변경-미국과 남한을 절연시킨 후 비핵무장 상태로 고립된 한국을 강압하기-을 추구하기 위해 핵무기를 동원하는 “공세적 핵확전”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글로 김진하, “북한의 핵전략 분석: 핵전력 고도화의 전략적 목표와 김정은 핵 독트린,” 『북한 NPT 탈퇴 선언 30년 특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3) 참조.

71) 정육식 (2022), p. 247.

72) 안경모 (2023), p. 189.

73) 핵심 내용은 1990년대 초 당시 세계 제3위 규모의 핵능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부다페스트 협정을 주도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그들(우크라이나)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클린턴 ‘우크라 핵무기 남겼더라면…’ 과거 ‘핵포기 설득’ 후회,” 2023년 4월 6일.

다. 평화협정이 쉽사리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고 아무도 비핵국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며, 북한은 선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는 오래된 북핵협상의 공식을 정책옵션 목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을 것이다.⁷⁴⁾

결국 “담대한 구상”이 되었던 “세심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이 되었던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시도를 통한 대북관여의 공간은 갈수록 협소해지는 형국이다. 2022년 들어 김정은과 김여정이 한목소리로 자신들의 핵을 “국체”라고까지 정의하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⁷⁵⁾ 당분간 북미간 혹은 남북간에 진지한 담판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동안 북한은 빗장을 걸어 잠근 채, 한편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정권교체를 기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⁷⁶⁾하면서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2021년 4월 30일 발표된 바이든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서, 기존의 자유패권적 관점에서 국제안보 규범의 위반자로 규정되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유도하겠다는 단극시대 대북정책 노선이 고수되고 있다.⁷⁷⁾ “세심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 이름 붙은 바이든 시대의 대북한 전략은 트럼프식과 오바마식을 모두 뛰어넘은 제3의 독트린이 될 것이라는 호언장담과 달리,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사실상 전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⁷⁸⁾ 무엇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잣대로 북한을 타자화시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가운데, 대중국 전략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

74) 구갑우 (2022), pp. 73-74. 가령, 2022년 9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압박, 군사적 위협에 못이겨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를 걷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력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http://www.jajusibo.com/60458>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은 “현재 상황을 보면 김정은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리비아의 교훈을 다시 배운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침략과 점령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핵 역지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북미회담 前 백악관 실무자 ‘北, 우크라 보며 리비아 교훈 상기.’” 2022년 11월 2일.

75)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김정은 (2022. 9. 9.).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제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쳐정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 아직 판돈을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찌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쓰거운 경멸뿐이다.” 김여정,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22년 8월 19일, <http://www.jajusibo.com/60311> 반일 민족주의를 국가건설 신화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언어인 “고쿠타이(国体)”를 계승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지점이다. 일본제국이 패망하는 순간까지 고수한 일본 천황국가 체제를 가리켰던 개념을 동원해 핵무기 보유를 자아 정체성의 본령으로 묘사한 셈이다.

76) 김정은 (2022. 4. 25.).

77) 이승현·이승열·김도희, 2021,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NARS 현안 분석』 제206호,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i5Y9bZs92&fileName=

78) 2022년 5월 한국을 방문해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이 남긴 답변은 짧은 한문장 “안녕하십니까, 이상입니다(Hello, period)” 뿐이었다. 『연합뉴스』, “바이든, ‘김정은에 전할 말’ 문자 ‘헬로…끝,’” 2022년 5월 22일. 이는 전략적 “인내”를 넘어 전략적 “무시”에 가까운 모습으로 읽힌다.

들에 밀려 북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에너지가 패권 하강기에 접어든 미국에게 결핍된 상황이다. 비록 대화 개시를 위해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개방적 제스처를 반복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평양을 비핵화 협상에 유인할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2023년 현재까지도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이라는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조야에는 대북관여전략이 실패했다는 회의감이 팽배해 있다.⁷⁹⁾ 이런 맥락에서 워싱턴은 궁여지책으로 문제를 우회해 베이징이 북한문제의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역내에 미군의 자산을 더 배치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도리어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며 응수하는 형국이다.⁸⁰⁾ 즉, 베이징은 “미중 전략 경쟁의 대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비협조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⁸¹⁾

이와 같이 변화된 전략적 조건 속에서 미국 내에서도 북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어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특히 현실주의적 “군비 통제 학파(arms control school)”의 부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⁸²⁾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마키아벨리적인 권모술수와 강력정치만을 앞세우는 매파-와 달리 현실주의자들은 외교정책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안정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유주의적인 거대 사회공학이나 네오콘적인 정권교체론에 회의적인 현실주의⁸³⁾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세계관에 기초해 점진적인 접근과 타협적인 협상의 과정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힘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기예의 과정을 외교의 본질로 여긴다.⁸⁴⁾ 또한 안보 딜레마가 “상호적”인 위협인식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며, 상대의 정치체제적 속성보다는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구조적 차원에서 국가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⁸⁵⁾ 이런 관점에서 냉전 시기 조지 케넌(George Kennan)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심대한 이데올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지정학적 타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존하면서 장기적으로 타개책을 모색하는

79) 일례로, 커트 캠벨(Kurt Campbell)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023년 1월 참석한 한 세미나에서 대북 정책 관련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에 대해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북 관여 차원에서 시도한 전략들이 무시됐기 때문에 좌절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시점에 북한이 (도발의) 길에서 (대화로) 나올 것이라는 게 희망이지만, 현실점에서 그와 관련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이(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과도 접촉했지만 이미 알려진 것 이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캠벨 ‘北, 도발 국면…美는 물론 韓의 외교도 관심 없는 듯’,” 2023년 1월 13일.

80) 『한겨레』, “바이든 ‘중국이 북한 말려야’…시진핑은 원론적 답변 고수,” 2022년 11월 16일.

81) 『연합뉴스』, “[인터뷰] 빅터차 ‘中, 북핵문제 협조 안할 것…비자 중단 부당한 보복’,” 2023년 1월 15일.

82) VOA, “Experts: Regarding North Korea, US Must Shift Focus Form Denuclearization to Deterrence,” October 19, 2022, <https://www.voanews.com/a/experts-regarding-north-korea-us-must-shift-focus-from-denuclearization-to-deterrence/6795867.html>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전재성 (2023), pp. 67-69.

83) John J. Mearsheimer, 이춘근 역,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 (서울: 김앤김북스, 2020).

84) Marc Trachtenberg, “The Question of Realism: A Historian's View,” *Security Studies*, Vol. 13, No. 1 (2003).

85) Stephen Walt, “The Geopolitics of Empathy,” *Foreign Policy*, June 27,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6/27/the-geopolitics-of-empathy/>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의 재독해를 통해 미국식의 자유개입주의적 사고에 만연한 전쟁의 도덕화 경향을 비판하고, 정치의 비극성과 불안정성을 온전히 수용하여 대안적인 “평화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을 구성하려는 “성찰적 현실주의(reflexive realism)”의 도전에 대해서는 Jeremy Moses, “Peace Without Perfection: The Intersections of Realist and Pacifist Thought,”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53, No. 1 (2018).

“봉쇄”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⁸⁶⁾

이런 지적맥락에서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현실주의적 국제구조에 속하는 일개 행위자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 공감대(strategic empathy)”를 가진다. 즉, 북한을 흡수적 무정부 상태에 있는 하나의 “정상 국가”로 보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핵무기는 극도의 안보위협 환경에 처한 북한의 “합리적 선택”일 뿐이다.⁸⁷⁾ 적대적 무정부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가 서로 안보 딜레마에 얽혀 있기 때문에 북미 간 전쟁방지를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의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중심 메시지는—소련, 중국과 같은 여러 핵보유 적성국들과 지금까지 공존했듯이—불만족스럽지만 북한에 핵을 남겨두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2차 공격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이 불유쾌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북미 사이에 일정한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정권교체” 같은 탈냉전기 자유주의에 기반한 기성 해법은 모두 달성 불가능하며,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왜냐하면 주류 정책가들이 꿈꾸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은 이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리수를 유도해 위험한 국면—가령, 제제와 압박으로 절망적인 포위상황에 몰린 북한의 모험적인 도발행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자적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협상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종전 선언 등을 포함해 일정한 선제적 양보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일방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갖고 있는 피포위의식을 완화시켜 주어야 비로소 양국사이에 안정적 관계가 수립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⁸⁸⁾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것은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돌발적 발언이다. 2022년 10월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핵 정책 컨퍼런스에서 그녀는 군비통제와 관련해 북한과 다양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킨스 차관은 북미양국이 “마주앉아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군비통제도 언제든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지 군비통제 뿐 아니라 위협 감소, 전통적인 군비통제 조약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 군비통제의 모든 다른 요소들에 대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⁸⁹⁾ 물론 국무부는 바로 다음 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군비통제 협상론을 일축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86) John L. Gaddis, 홍지수·강규형 역, 『미국의 봉쇄전략』 (서울: 비봉, 2019), pp. 54-145.

87) James D. Fearon, “The Big Problem With the North Koreans Isn’t That We Can’t Trust Them. It’s That They Can’t Trust Us,” *The Washington Post*, August 16, 2017,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7/08/16/the-big-problem-with-north-korea-isnt-that-we-cant-trust-them-its-that-they-cant-trust-us/>

88) 이상에서 요약된 북핵문제에 대한 군비통제학파에 속한 논자들의 최근 글로는 Toby Dalton and Ankit Panda, “U.S. Policy Should Reflect Its Own Quiet Acceptance of a Nuclear North Kore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ovember 15, 2022, <https://carnegieendowment.org/2022/11/15/u.s.-policy-should-reflect-its-own-quiet-acceptance-of-nuclear-north-korea-pub-88399>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Jeffrey Lewis, “It’s Time to Accept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The New York Times*, October 13, 2022, <https://www.nytimes.com/2022/10/13/opinion/international-world/north-korea-us-nuclear.html>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Taesuh Cha, “Confronting the North Korean Question in a Post-Unipolar World,” *The National Interest*, November 6, 2022,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onfronting-north-korean-question-post-unipolar-world-205736>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등 참조.

89) 『VOA』, “국무부 군축 차관, 북한과 군축 논의 가능성에 ‘거부하지 않을 것’,” 2022년 10월 29일.

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목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⁹⁰⁾ 그러나 이 같은 공식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성 30년간의 비핵화 패러다임을 벗어나 군비통제와 같은 마이너한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미국의 관가에서 공개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워싱턴의 담론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히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V. “Winter is coming”: 탈단극시대 대북정책의 현실주의적 전환

“절망스럽게도 정치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것이란 점을 알지만 그럼에도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용기이다. 여러 임시방편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판단이다…… 허울뿐인 화합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인간존재의 비극적 모순을 봉합하고 왜곡하길 선호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타협이 불만족스럽고 불확실하며 역설적이기까지 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일 뿐이라는 사실에 실망할 것이다.”⁹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된 탈단극 계기의 도래와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길을 질주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 대한민국 정부도 이미 대전략의 궤도수정을 모색 중이다. 물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나 협상 초기에 일괄타결을 하고, 비핵화 진전에 맞춰 동시적·단계적으로 상응 조치를 한다는 “담대한 구상”의 방법론은 과거 한국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그대로 계승한 모양새이다.⁹²⁾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즉, 갈수록 (보수적) 공론장 영역에서 “비핵화” 노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핵역지”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⁹³⁾ 특히 기존의 “확장 억제”를 강화할 방안에 대한 주문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불신감이 강화되면서 전술 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 나아가 독자 핵무장에 대한 주장도 공공연히 분출되고 있다.⁹⁴⁾ 이와 같은 담론지형의 급격한 변화의 근거에는 바로 대북정책 목표에 있어 “비핵화 패러다임의 종식”이 깔려 있다.

90) 『서울신문』, “美 국무부 ‘대북 군축 협상론’ 일축…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 2022년 10월 30일.

91) Hans J. Morgenthau, “The Evil of Politics and the Ethics of Evil,” *Ethics*, Vol. 56, No. 1 (1945), p. 18.

92)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2년 12월 28일, <https://www.president.go.kr/download/6401a5b15elfe>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pp. 21-22.

93) 가령, 2023년 초 대표적 보수언론의 한 사설은 “북핵의 고도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으로 돼버렸다. 이제는 북핵 대응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완벽한 핵역지로 선회할 때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나머지 말들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단언하였다. 『조선일보』, “美 핵우산 한계 지적 尹대통령,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 2023년 1월 3일.

94) 『국민일보』, “한국 독자 핵개발, ‘신기루’일까…북핵 대응 네 가지 시나리오,” 2023년 4월 15일.

심지어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 대통령의 공개된 발언을 통해서도 기성 비핵화 문제들의 전제가 깨져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발언했다.⁹⁵⁾ 급기야 2023년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금기시되었던 독자 핵무장 옵션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였다.⁹⁶⁾ 한편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비해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거나,⁹⁷⁾ 더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⁹⁸⁾는 등 기존에 터부시되었던 선택지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핵무장한 상대국가를 다루는 첫 번째 대책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⁹⁹⁾ 그러나 이와 같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만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러한 북핵 맞대응 “억지” 정책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가령, 한미는 연합군사훈련 기간 전략자산 운영의 “가시성”을 높이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플랫폼을 동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대칭 확산 전략에 맞서 비록 저위력의 핵무기일지라도 일단 실전에서 사용될 경우 평양 정권은 곧바로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다.¹⁰⁰⁾ 바로 여기서 보듯 “억지”는 전쟁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이나, 그 정의상 상대의 치명적 손실을 가할 군사력과 작전계획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와 군비

95) 『조선일보』, “尹대통령 ‘美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 2023년 1월 2일.

96)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1월 11일, <https://www.korea.kr/news/presidentView.do?newsId=148910481> 이후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핵무기 개발가능 발언의 수위를 누그러뜨렸다. *Wall Street Journal*, “South Korea Leader Dials Back Comments 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January 19, 2023, <https://www.wsj.com/articles/south-korea-leader-dials-back-comments-on-developing-nuclear-weapons-11674154870>

97) CSIS Commi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January 19, 2023,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2023-01/230119_Korean_Commission_2023.pdf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pp. 18-19.

98) Doug Bandow, “Washington Might Let South Korea Have the Bomb,” *Foreign Policy*, January 17,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01/17/us-south-korea-nuclear-weapons-denuclearization/>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Jennifer Lind and Daryl G. Press, “South Korea’s Nuclear Options,” *Foreign Affairs*, April 19, 2023,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south-koreas-nuclear-options-north-korea-deterrence>

99) Toby Dalton and Jina Kim, “Rethinking Arms Control with a Nuclear North Korea,” *Survival*, Vol. 65, No. 1 (2023), p. 22.

100) 2023년 2월 한미 국방부는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겨레』, “미 ‘북핵 사용시 정권 종말’ 경고… 한·미, 가상 대응훈련 실시,” 2023년 2월 24일.

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¹⁰¹⁾ 다시 말해, 3축 체계 같은 재래식 무기 대응이 되었던 확장억제 같은 핵무력을 통한 대응이 되었던 역지의 강화는 작용-반작용의 반복을 통해 위기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¹⁰²⁾

특히 참수작전의 실행능력과 함께 일거에 북한의 핵무력을 초토화시킬 군사력 기술의 우위를 미국이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더욱 강렬한 포위의식 혹은 절박감(“now or never,” “use or lose”)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술핵탄두를 실은 단거리 미사일의 즉응태세(launch on alert)를 유지하고, 그 발사권한을 재래식 포병부대의 현장사령관에게 위임하는 이른바 “위태로운 발사태세(hair-triggered posture)” 형태로 핵무기를 운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¹⁰³⁾ 현재 북미 혹은 남북 관계처럼 확실한 확전통제 기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환경에서는 견잡을 수 없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¹⁰⁴⁾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협상과 함께 “포괄적” 군비통제를 통해 한반도 군사관계의 긴장도를 낮추는 방법이 절실하다. 이는 북한의 핵전력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도 군비통제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군비통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행태적(behavioral, 선언과 의사소통을 통해 미래 행동의 예측성 증대), 운용적(operational, 기습공격 공포와 확전위험을 낮춰줄 완충기제 제공), 절차적(procedural, 감시와 검증을 가능케 할 정보와 투명성 제공), 구조적(structural, 보유한 군사력의 범위와 스케일 제한) 차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¹⁰⁵⁾

둘째, 핵억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안보적” 상상력의 범위에는 비핵화가 당분간 불가능해진 전제조건에서 남북, 북미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고민이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적 대책 수준을 넘어 어떻게 극도로 적대적인 국가간 관계의 냉각을 가져올 것인가를 숙고해야만 한다. 즉, 한반도 주변의 흡수적 아나키 문화를 어떻게 로크적 형태로 전환시킬 것인가-불구대천의 숙적(enemy) 관계에서 공존하며 경쟁하는 라이벌(rival) 관계로의 전환-의 문제¹⁰⁶⁾인데, 역지와 군비통제 같은 층위를 넘어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역내 유관국 간의 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 같은 외교적 해법이 덧붙여질 때, 한반도 신냉전의 위험관리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¹⁰⁷⁾

종합하면, 탈냉전 30년과 함께 진행되었던 대북한 전략은 비핵화와 흡수통일의 목표

101) 가령, 최선희 외무상은 2022년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결의한 것에 대해 “최근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들을 벌여놓았지만 우리의 압도적 대응을 견제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저들의 안보 위기를 키우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겨레』, “북 최선희 ‘미 확장억제 강화 땀 군사대응 더 맹렬해질 것’.” 2022년 11월 17일.

102) 김진아 (2023), p. 110; 황일도 (2023), p. 25.

103) 황일도 (2023), p. 5.

104) 김태형 (2022), p. 257.

105) Dalton and Kim (2023), pp. 32-33.

106)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259-297.

107) Howard W. French, “Ending North Korea’s Isolation Is the Only Solution Left,” *Foreign Policy*, June 15,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06/15/us-north-korea-policy-nuclear-weapons-missile-test-s-economy-diplomacy/>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Dan Leaf, “I know How Nuclear War Is Waged, So I’m Calling for Peace With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rch 29, 2023, <https://www.nytimes.com/2023/03/29/opinion/north-korea-war-peace.html>

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대북정책의 기본전제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하면서, 탈단극시대에 맞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단극시대라는 긴 여름은 종식되었고, 대신에 전지구 차원의 미중간 패권경쟁과 한반도 차원의 남북간 주권게임이 중첩, 복합되어 진행될 긴 신냉전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¹⁰⁸⁾ 근본적으로 변화된 전략적 환경하에서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거버넌스 모색에 있어 장기적, 최종적 목표와 단기적, 잠정적 목표를 분리하면서 “모두스 비벤디”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방안이다.¹⁰⁹⁾

우선 통일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처럼 먼 미래에는 완전한 남북통합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적으로는 두 주권국가 간의 상당 기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코리아 양국 체제”¹¹⁰⁾의 길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¹¹¹⁾ 함께 사는 방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정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비판한 담화에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은 흥미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다 공식적 차원에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규정했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당원의 의무 부분에서도 “조국통일”과 연관된 내용이 사라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역시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통일혁명론을 폐기하고 남북한의 “공존”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¹¹²⁾

다음으로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적 비전으로 남겨 두되, 단기적으로는 군비통제 협상과 냉전형의 억지와 봉쇄라는 임시적 해법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안보 딜레마를 완화해주는 “전략적 안정”을 우리가 당분간 추구해야 할 전략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¹¹³⁾ 박진 외교부 장관의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¹¹⁴⁾라는 발언이 현재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오랜 공식적 스탠스를 대변하고 있지만, 국제정치학의 엄밀한 개념 정의상으로는 기실 냉전 상태도 “소극적” 평화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지난 30여 년간 진행되어온 탈냉전기 한반도의 기본 외교구조를 깨버리는 중대한—그리고 비극적인—선택을 의미한다.¹¹⁵⁾ 그러나 이는 북한 핵능력의 극적인 성장과 단극시대의 종식이라는 전략적 조건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전략 패러다임을 적응시켜나가는 문제로서, 그런 뼈아픈 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위기 안정성 증대와 우발적 확산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불만족스러운” 대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간에 다다랐다. 앞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동안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 안보환경의 조형에 있어 미국이 압도적으로 상황을 좌우하는 시간은 종료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

108) 전재성 (2023), pp. 62-64.

109) 민병원, “정치적 자유주의와 모두스 비벤디: 국제정치의 불량국가 담론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 제32권 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0).

110)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파주: 아카넷, 2019).

111)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 『외교부』, 2018년 3월 21일, https://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7973

112) 구갑우 (2022), p. 64.

113) 김진아 (2023), pp. 117-118.

114) 『한겨레』, “한-미 외교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2023년 2월 6일.

115) Dalton and Kim (2023), p. 34.

등, 우리에게 닥친 현실정치(realpolitik)의 “비극”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구갑우.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과 대외정책.” 김상기 外.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김갑식·신종호.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신종호 外.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파주: 아카넷, 2019).
- 김진아. “북한의 핵태세 변화: 전략적 안정성 측면의 시사점.” 『북한 NPT 탈퇴 선언 30년 특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3).
- 김진하. “북한의 핵전략 분석: 핵전력 고도화의 전략적 목표와 김정은 핵 독트린.” 『북한 NPT 탈퇴 선언 30년 특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3).
- 김태형. “핵무기의 국제정치 지형도.” 『국제정치논총』, 제62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5호 (한국정치학회, 2005).
- 민병원. “정치적 자유주의와 모두스 비벤디: 국제정치의 불량국가 담론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 제32권 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0).
- 박원곤.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한국국가전략』 제19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 안경모.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한국정치연구』 제32집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 이우탁.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제2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 임수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적 국가행동에서 중국 및 미·중관계 변수: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김용호 外.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 대외행동의 특징과 유형』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 전재성. “한반도 정전체제와 북핵체제를 넘어: 불안전 주권성의 전개와 극복.”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 정육식. “북한이 크게 달라졌다.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황해문화』 117호 (새얼문화재단, 2022).
-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질서.”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 차태서. “탈단극적 계기로의 진입? 포스트-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세계질서의 대전환 읽기.”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 최재덕.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연대의 심화: 미·중·러의 지정학적 대결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소연구』 제46권 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
- Bleiker, Roland. *Divided Korea: Toward a Culture of Reconcili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 Dalton, Toby and Jina Kim. “Rethinking Arms Control with a Nuclear North Korea.” *Survival*, Vol. 65, No. 1 (2023).
- Futter, Andrew. 고봉준 역. 『핵무기의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6).
- Gaddis, John L. 홍지수·강규형 역. 『미국의 봉쇄전략』 (서울: 비봉, 2019).

Ha, Yong-Chool and Beom-Shik Shin. "The Impact of the Ukraine War o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Asian Survey*, Vol. 62, No. 5-6 (2022).

Mearsheimer, John J. 이춘근 역.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 (서울: 김앤김복스, 2020).

Morgenthau, Hans J. "The Evil of Politics and the Ethics of Evil." *Ethics*, Vol. 56, No. 1 (1945).

Moses, Jeremy. "Peace Without Perfection: The Intersections of Realist and Pacifist Thought."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53, No. 1 (2018).

Narang, Vipin.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1 (2015).

Trachtenberg, Marc. "The Question of Realism: A Historian's View." *Security Studies*, Vol. 13, No. 1 (2003).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Wit, Joel S. "North Korea: The Leader of the Pack."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4, No. 1 (2001).

<신문>

『경향신문』. "클린턴 '우크라 핵무기 남겼더라면...' 과거 '핵포기 설득' 후회." 2023년 4월 6일.

『국민일보』. "한국 독자 핵개발, '신기루'일까...북핵 대응 네 가지 시나리오." 2023년 4월 15일.

『뉴스1』. "北 김정은 '적들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 '고체연료 ICBM' 발사 확인." 2023년 4월 14일.

『뉴스1』. "北 대놓고 ICBM 쏘는데... 안보리는 1년째 '빈손'." 2023년 4월 18일.

『뉴시스』. "[중러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中 9600자, 英 4만3000자로 '반미연대'." 2023년 3월 22일.

『문화일보』. "미국 '북, 전략·전술핵 위력 상관없이 핵쓰면 정권종말' 재경고." 2023년 2월 24일.

『민족일보』. "북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국가우주개발국' 등." 2013년 4월 2일.

『서울신문』. "美 국무부 '대북 군축 협상론' 일축...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 2022년 10월 30일.

『세계일보』. "'비행장 파괴' 카드로 공군력 격차 뒤집기... 핵위협 美서 南으로 이동." 2023년 2월 21일.

『연합뉴스』. "바이든, '김정은에 전할 말' 문자 '헬로...끝'." 2022년 5월 22일.

『연합뉴스』. "북미회담 前 백악관실무자 '北, 우크라 보며 리비아 교훈 상기'." 2022년 11월 2일.

『연합뉴스』. "캠벨 '北, 도발 국면...美는 물론 韓日과의 외교도 관심 없는 듯'." 2023년 1월 13일.

『연합뉴스』. "[인터뷰] 빅터차 '中, 북핵문제 협조 안할 것...비자 중단 부당한 보복'." 2023년

1월 15일.

- 『연합뉴스』. “北 ‘다종무기 탑재 전술핵탄두’ 공개로 위협…직경 40~50cm 추정.” 2023년 3월 28일.
- 『자주시보』. “북, ‘선제 핵공격’ 명시한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2022년 9월 9일.
- 『조선비즈』. “폼페이오 ‘김정은, 주한미군 원했다… 中 공산당 위협 탓’.” 2023년 1월 25일.
- 『조선일보』. “尹대통령 ‘美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 2023년 1월 2일.
- 『조선일보』. “[사설] 美 핵우산 한계 지적尹대통령,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 2023년 1월 3일.
- 『중앙일보』. “전문가 55% ‘30년내 북핵 해결 불가능’…자체 핵보유 62% 반대.” 2023년 3월 24일.
- 『중앙일보』. “美 ‘러, 식량 제공 대가로 북한서 탄약 추가확보 모색’.” 2023년 3월 31일.
- 『한겨레』. “바이든 ‘중국이 북한 말려야’…시진핑은 원론적 답변 고수.” 2022년 11월 16일.
- 『한겨레』. “북 최선희 ‘미 확장억제 강화 땀 군사대응 더 맹렬해질 것’.” 2022년 11월 17일.
- 『한겨레』. “한-미 외교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2023년 2월 6일.
- 『한겨레』. “미 ‘북핵 사용시 정권 종말’ 경고…한미, 가상 대응훈련 실시.” 2023년 2월 24일.
- 『한겨레』. “권영세 ‘북한 인권은 기본 원칙…아침으로 평화 이룰 수 없다’.” 2023년 4월 9일.
- 『SBS』. “전략폭격기엔 숨다가 항공모함엔 ‘올테면 와 바라’는 김정은?” 2023년 4월 9일.
- 『UPI뉴스』. “김정은 12월 군마행군 이후 ‘5만 명 백두산 답사행군’.” 2020년 2월 13일.
- 『VOA』. “국무부 군축 차관, 북한과 군축 논의 가능성에 ‘거부하지 않을 것’.” 2022년 10월 29일.
- New York Times*. “North Korea Sees New Opportunities in ‘Neo-Cold War’.” November 13, 2022.
<https://www.nytimes.com/2022/11/13/world/asia/north-korea-missile-tests.html>
- VOA. “Experts: Regarding North Korea, US Must Shift Focus Form Denuclearization to Deterrence.” October 19, 2022.
<https://www.voanews.com/a/experts-regarding-north-korea-us-must-shift-focus-from-denuclearization-to-deterrence/6795867.html>
- Wall Street Journal*. “South Korea Leader Dials Back Comments 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January 19, 2023.
<https://www.wsj.com/articles/south-korea-leader-dials-back-comments-on-developing-nuclear-weapons-11674154870>

<인터넷 자료>

- 김보미. “북한의 새로운 핵독트린: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분석.” 『INSS 이슈브리프』. 387호. 2022년 9월 13일.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496&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INSS 전략보고』. 182호. 2022년 9월 22일.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209/F20220922081843373.pdf>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년 7월 10

- 일. <http://www.jajusibo.com/51502>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2년 4월 4일.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72>
-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자주시보』. 2022년 8월 19일. <http://www.jajusibo.com/60311>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27일. <http://www.jajusibo.com/61575>
- “무모한 핵망상은 자멸을 부른다.”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1일. <http://www.jajusibo.com/62207>
- 김정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8년 4월 21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07>
-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9년 4월 13일. <http://www.jajusibo.com/45000>
- “조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101000066>
-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54088§ion=sc61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http://www.jajusibo.com/57083>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 6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2년 1월 20일. <http://minzokilbo.com/wp/?p=144663>
-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22년 4월 25일. <http://www.jajusibo.com/5936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http://www.jajusibo.com/60458>
-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1일. <http://www.jajusibo.com/6138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00mm초대형방사포 증정식에서 하신 답례연설.” 『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1일. <http://www.jajusibo.com/61381>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3년 3월 28일. <http://www.jajusibo.com/62162>
- 김태주·양갑용. “미중 전략경쟁 시기 북중관계의 이중성: 중국은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INSS 전략보고』. 209호. 2023년 1월 27일.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301/F20230127091014306.pdf>
-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통령실』. 2022년 12월 28일. <https://www.president.go.kr/download/6401a5b15e1fe> (검색일: 2023년 4월 20일)
-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 『외교부』. 2018년 3월 21일. https://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7973

- 박원근. “급진화한 북한 다루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와 윤석열 정부의 숙제.” 『Global NK 논평』. 2022년 5월 6일.
<https://www.eai.or.kr/new/ko/project/view.asp?intSeq=21244&code=98>
-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Global NK 논평』. 2023년 3월 9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750&board=kor_issuebriefing
- 양육.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도발의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2-30호. 2022년 12월 21일.
<https://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86296>
-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1월 11일.
<https://www.korea.kr/news/presidentView.do?newsId=148910481>
- 이승현·이승열·김도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NARS 현안분석』. 제206호. 2021년 8월 5일.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i5Y9bZs92&fileName=
- 장세호.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Global NK 논평』. 2023년 3월 23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758&board=kor_issuebriefing
- 전봉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8호. 2022년 10월 24일.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5X4d1e06hi0+KyH9725YGTcq.public21?storg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17785781352337074&fileSn=1>
- 황일도. “최근 북한의 중장기 국가비전 언급: 대외·경제정책과의 연관성.”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37호. 2022년 12월 5일.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47XlHzmKcs7MGxBuKKNtino-.public22?storg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21393675086327148&fileSn=1>
-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IFANS 정책연구시리즈』. 2022-05. 2023년 1월 6일.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6nQUmMgmH6YSwShrg4kfjt0Z.public21?storg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24180965258299262&fileSn=1>
- 황지환. “북한의 신냉전 인식과 한국의 대외전략.” 『Global NK 논평』. 2023년 4월 5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812&board=kor_issuebriefing
- Bandow, Doug. “Washington Might Let South Korea Have the Bomb.” *Foreign Policy*, January 17,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01/17/us-south-korea-nuclear-weapons-denuclearization/>
- Cha, Taesuh. “Confronting the North Korean Question in a Post-Unipolar World.”

- The National Interest*, November 6, 2022.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onfronting-north-korean-quest-ion-post-unipolar-world-205736>
- Chinoy, Mike. “Kim Jong Un Is Putin’s and Xi’s New Best Friend.” *Foreign Policy*, September 12,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09/12/north-korea-russia-china-partnership-p-utin-xi-kim/>
- CSIS Commi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January 19, 2023.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2023-01/230119_Korean_Commission_2023.pdf
- Dalton, Toby and Ankit Panda. “U.S. Policy Should Reflect Its Own Quiet Acceptance of a Nuclear North Kore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ovember 15, 2022.
<https://carnegieendowment.org/2022/11/15/u.s.-policy-should-reflect-its-own-quiet-acceptance-of-nuclear-north-korea-pub-88399>
- Fearon, James D. “The Big Problem With the North Koreans Isn’t That We Can’t Trust Them. It’s That They Can’t Trust Us.” *The Washington Post*, August 16, 2017.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7/08/16/the-big-p-robblem-with-north-korea-isnt-that-we-cant-trust-them-its-that-they-cant-tru-st-us/>
- French, Howard W. “Ending North Korea’s Isolation Is the Only Solution Left.” *Foreign Policy*, June 15,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06/15/us-north-korea-policy-nuclear-weapons-missile-tests-economy-diplomacy/>
- Ignatius, David. “Japan Is Reacting to Russia and China Rationally. It Is Only the Beginning.”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2,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3/01/12/russia-china-threat-japan-military>
- Leaf, Dan. “I know How Nuclear War Is Waged, So I’m Calling for Peace With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rch 29, 2023.
<https://www.nytimes.com/2023/03/29/opinion/north-korea-war-peace.html>
- Lewis, Jeffrey. “It’s Time to Accept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The New York Times*, October 13, 2022.
<https://www.nytimes.com/2022/10/13/opinion/international-world/north-korea-us-nuclear.html>
- Lind, Jennifer and Daryl G. Press. “South Korea’s Nuclear Options.” *Foreign Affairs*, April 19, 2023.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south-koreas-nuclear-options-no>

[rth-korea-deterrenc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ebruary 6, 2023.

<https://www.dni.gov/files/ODNI/documents/assessments/ATA-2023-Unclassified-Report.pdf>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Walt, Stephen. “The Geopolitics of Empathy.” *Foreign Policy*, June 27,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6/27/the-geopolitics-of-empathy/>

Yeo, Andrew. “Why Furt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uld Be Tough to Add.” *The Washington Post*, July 5,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07/05/north-korea-sanctions-weapons-unsc-security-council-veto-russia-china/>



1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토론: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

차태서 교수의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토론문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붕괴, 통일, 비핵화 등을 목표로 추진했던 한국의 대북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현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북전략을 군비통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전략적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차태서 교수님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외교적 해법도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한반도 신냉전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특히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고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대립하는 국면에서 한국의 대북한 정책이 현실주의 관점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논문에 근거하여 세 가지 쟁점으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난 30년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차교수님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추진한 대북한 정책은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 없고 또 실패가 중대했다는 점에서는 양쪽 모두의 실패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실패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보수는 북한의 붕괴를 확신하며 흡수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객관적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았다. 북한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는 현실과 전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wishful thinking이 투영되어 엄청난 괴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사망시마다 신빙성 있게 회자되었던 북한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보수의 대북관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컸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진보의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한 판단오류와 비핵화에 대한 기능주의적 기대 등이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핵협상 과정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미온적 대응의 문제점과 교류협력 정책이 가져온 사회, 문화, 경제의 변화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실행되지 않은 것도 북한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붕괴를 전제로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핵화의 기회를 놓쳤다고 본다. 또한 2002년 북핵 위기 당시에도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서 겨우 벗어나 2002년 7월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견제가 들어온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미국의 견제를 북한의 개발플랜에 대한 주변국의 방해로 보고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세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진보의 정책실패보다는 주변국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대주변국 외교역량 부족까지를 진보의 실패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딱히 할말은 없지만 진보-보수의 실패

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고 군비통제로 위험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비핵화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차교수님은 한반도 비핵화는 최종적 비전으로 남겨둔다고 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군비통제로 정책을 전환하면 미국의 비핵화 목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미국의 비핵화 목표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어떤 조건에서 달성할 수 있는가. 차교수님이 비핵화를 최종적 비전으로 둔다고 했는데, 그 최종적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윤석열-바이든의 워싱턴 선언에서 NCG를 창설하고 핵억제력을 강화한 것은 차교수님이 제안한 정책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다. 워싱턴 선언이 결과적으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남한 모두 공세적 핵독트린으로 대응하면 상당한 위험이 야기될 터인데, 북한의 공세적 핵독트린에 대응하여 남한이 준비하고 있는 3축체제는 원만한 작동이 가능한지, 북한의 핵사용 징후를 포착하면 실행에 옮긴다는 작계5015에 의한 선제타격은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것으로 북한의 핵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인지. 미국은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정권의 종말 이전에 한국정권의 종말이 먼저 오는 것은 아닌지, 즉 그 정책이 과연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 시뮬레이션에서 개전초기 100~150만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고, 북한이 핵무기 사용시에는 300만명까지 피해를 예상했으며, 북한이 현재 30~5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최고 위력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의 10배 정도로 평가되어 피해가 막중할 터인데, 과연 억지력 차원에서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한미 NCG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위기시에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2

통일시대 북한학의 방법과 과제

발표: 강진웅(경기대학교)

통일 시대 북한학의 방법과 과제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I. 전체주의와 내재적 접근

냉전과 탈냉전을 넘어 북한 연구의 주된 패러다임은 전체주의적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냉전 시대 북한 연구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가짜 김일성설(이명영, 1974; 허동찬, 1987)이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 연구에서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은 이미 1970년대 사회과학계에서 이루어졌다. 이념적 전체주의 모델에 대한 반성으로서 북한의 특수성과 비교사회주의 방법이 강조되었고(양호민 외, 1975), 사례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법칙정립적’(nomothetic) 연구가 제안되었다(안병영, 1977). 또한 정치학적, 행태학적 접근에 매몰된 법칙정립적 연구에 반하여 사회적 행위의 원인과 의의를 규명하는 ‘개성기술적’(idiographic) 이해방법론이 제시되기도 했다(황성모, 1977).

이처럼 1세대 북한 연구방법론 논쟁은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하여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성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악마화가 지속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불을 타고 ‘북한바로알기운동’과 ‘내재적 접근’이 제시되었다.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냉전적 북한 연구를 극복하고자 했던 송두율(1988)은 ‘내재적’(immanent) 방법을 제시하며 북한을 외부의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내재적’이 ‘경험적’이란 의미를 나타낸다는 송두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을 검증하는 방법론과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식론이 구별될 필요가 있었고, 북한 사회를 사회주의 이념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과 우리의 인식이 경험에 의거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비판을 받았다(강정인, 1994; 김연철,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율의 문제 제기가 세련된 방법론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고 내재적=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은 접근 불가능한 북한 연구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에서 내재적 접근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신냉전 상황과 전체주의적 접근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북한의 속살과 침묵된 민초의 삶을 들여다보는 열정과 노력 그 자체가 내재적 접근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론을 어떻게 세련된 방법론으로 전략화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체제 연구는 ‘유격대국가론’(와다, 2002), ‘수령제’(김연철, 2001; 스즈끼, 1994; 이태섭, 2001), ‘유일체제론’(이종석, 2000), ‘유교문화적 접근’(Cumings, 1997; Lee, 1975), ‘신념체계적 접근’(Park, 2002), ‘극장국가론’(권현익·정병호, 2013) 등의 다양한 접근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악의 축’으로 시작하여 ‘불량국가’(Chomsky, 2000), ‘불가능한 국가’(Cha, 2012) 등으로 일궈진 북한의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었고, 학문적으로도

전체주의적 접근(Lankov, 2002; McCormack, 1993, 2002; Oh and Hassig, 2000)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을 거친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단편적인 사료조사의 한계를 안고 있었던 북한 연구의 방법론을 양적, 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생애사 방법, 일상생활 연구, 북한주민의식 조사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세와 정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연구는 여전히 이념적 편향의 오류를 안고 있으며 정치학과 주변학문의 연계학문으로서 사회과학 방법론의 한계를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다. 또한 암묵적으로 부여받은 통일학의 당위적, 상징적 과제의 부담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글은 학제로서의 북한학과 사회과학 방법론의 거시적인 패러다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방법론의 견지에서 북한 연구방법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질적 접근과 방법을 중심으로 통일 시대 ‘북한문화 아카이빙’의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 연구의 두터운 기술

1. 미시 속의 거시, 일상 속의 구조

냉전의 한복판이었던 1970년대에 ‘법칙정립적 관점’과 ‘이해사회학적 관점’이 북한 연구에서 실증주의적 사회과학 방법론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의 북한 연구방법론 논쟁 역시 1세대 사회과학 방법론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사회과학의 연계학문으로 발전한 북한학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양적, 질적 방법론 그 자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연구방법론이 사회과학 방법론과 다른 것이 아닐 때 이 글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거시적 연계 혹은 불가능한 집합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단절된 방법의 획일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식에서 장점을 찾아 전략화는 방법을 추구한다.

20세기 후반 이후 탈북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해짐에 따라 북한 사회의 내재적 모습과 미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활성화되었고(박순성·홍민, 2010; 조정아 외, 2010), 질적 연구에서도 구조와 행위,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는 분석 경향이 두드러졌다(이희영, 2005; Burawoy, 1998; Maynes, Pierce, and Laslett, 2008). 무엇보다도 심층면접을 활용한 구술생애사(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1; 이향규, 2001; 좋은벗들, 2000)와 이를 활용한 분석(조정아 외, 2010 등)이 미시와 거시를 연계하는 방법론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연구(박순성·홍민, 2010; 차문석, 2008) 역시 시론적 차원이지만 사료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거시적 차원과 연계시키는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양적 방법론의 견지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이 탈북자 정착실태 및 사회통합조사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자들의 통일의식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남북하나재단(2022a, 2022b)의 설문조사(n=3000)는 탈북자 정착에 국한되었고 연간 100여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한 통일평화연구원(김병로 외, 2022; 김학재 외, 2021 등)의 설문조사(2011~2020, N=1242) 역시 거시적인 통일의식과 사회변동을 넘어 분석 영역과 기법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사료조사와 문화 아카이빙

연구방법론(설계, 수집, 분석)의 측면에서 사료 조사(일기, 수기, 비망록, 신문, 잡지, 문헌, 작품 등)와 아카이빙은 넓은 범주의 질적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북한의 사료 조사는 신뢰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대숙(2001)은 김일성 노작에 대한 분석에서 김일성선집,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회고록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970년대 이전에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필, 수정, 삭제, 조작되었고 1945년 이전 자료는 거의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 1930년대에 출판했다고 주장하는 50여개의 문헌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1970년대에 가공되었다는 것이다(서대숙, 2004: viii).

그러나 실증적 사실 이외에도 ‘맥락적 사실’의 발견 역시 북한 연구 및 방법론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1945년 이전 김일성의 연설 중 ‘트르 제국주의 동맹’, 카룬회의 연설문 등은 거의 조작에 가까운 것이나 그 이후의 유격대 조직화와 노선, 회의 내용 등은 기억의 확장 혹은 과장에서 기록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실증주의의 맥락에서 사료의 오염 가능성을 판별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지만 맥락적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체제와 사회의 분석에서 ‘두터운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망국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 암담했던 우리 조선에 려명이 밝아왔다. 주체1(1912)년 4월 15일 평양의 만경대에서 절세의 위인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었던 것이다. ...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태양을 맞이한 대통운이었으며 대경사였다.(최동철 외, 2013: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에 나오는 위의 설명은 김일성에 관한 항일무장투쟁 역사의 신화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는 기본적인 사실과 함께 사실을 과장하는 허구가 적지 않다. 동북항일연군 소속이 ‘반일인민유격대’로 포장되거나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둔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허구적 신화와 신화 창조의 역사적 사실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맥락적 사실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북한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으로 선전되는 1937년 ‘보천보 전투’는 신화의 내용 자체는 과장 혹은 허구이지만 대중들에 의한 신화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었다(한홍구, 2003, 162-163). 100여명의 유격대를 이끌고 보천보를 습격한 김일성의 일화는 국내 언론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대중들에 의해서 김일성에 대한 신화와 전설이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전파되었다(한홍구, 2003: 152-154).

이처럼 위로부터의 선전과 단순한 실증주의에서 벗어나 맥락적 사실을 분석하여 사료를 두텁게 기술하는 전략은 일상과 미시의 행위를 통해 체제와 거시의 구조를 드러내는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료 조사에서 맥락적 사실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두터운 기술의 방법은 개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담은 자료(기록과 진술)를 구축하는 문화 아카이빙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김일성 시대 생존자들이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북한의 생활문화에서 은폐된 행위자의 미시와 일상을 드러내 이를 거시, 구조와 연계시키는 전략(강진웅, 2015; 오창은, 2018;

차문석, 2008)은 이들의 일상과 기억을 기록하는 문화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III. 북한 연구와 질적 방법론의 확장

통일 시대 북한문화 아카이빙을 구축하는 방법(론)에서 사료 조사의 전략적 확장은 물론 탈북자 면접조사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미시와 거시, 일상과 구조를 연계하여 북한 체제를 분석하고 은폐된 개인사를 공정한 사회사로 반영하는 전략과 관련된다. 내재적 접근, 두터운 기술, 문화 아카이빙으로 가는 방법론적 전략에서 탈북자 면접에 대한 함의를 양적 연구와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1. 일반성의 문제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양적 연구는 질적인 사회 현상에서 개념을 추출한 뒤 추상적인 개념을 관찰 가능하게 하는 ‘물화’의 과정 즉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거쳐 가설 설정과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이론적 일반화를 지향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양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질적인 사회 현상을 코딩과 리코딩을 통해 ‘양화’시킨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상징적 상호작용론, 해석주의, 구성주의에 토대를 두는 질적 방법론은 소수 사례의 일반성을 전제한 채 연구자와 대상자 혹은 연구 대상자간 상징적 상호작용과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구성되는 사회 현상의 의미를 개념과 범주의 재구성을 통해 이론을 생성하여 일반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 방법에 기초한 탈북자 면접 자료는 ‘대표성’과 ‘검증’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인과관계의 검증에 주력하는 법칙정립적인 양적 연구와 달리 사례기술적인 질적 연구는 사례의 특수성과 맥락의 이해에 기반을 둔다.¹⁾ 기어츠(Geertz, 1973: 6-7, 27)는 문화연구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은 현상적 기술 속에 겹겹이 둘러싸인 의미를 중층적으로 기술하는 ‘해석적 과학’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로 통칭되는 기어츠의 해석적 방법론에서 이론적 일반화는 여러 사례 속에서 비교되거나 규칙적인 법칙을 찾는 일반화가 아니라 각 사례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수한 일반화’를 의미한다(Geertz, 1973: 25-26). 연역적 보편적 일반성이 아니라 귀납적 구체적 일반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일반화에서 유형적 혹은 더 나아가 법칙적 일반화를 지향하고자 할 때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장점을 존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탈북자 면접과 관련된 이론적 표본 추출은 주로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에 의존하는데 ‘large N’의 장점을 살려 필요 시 사례 수를 확장하고 성별, 지역, 출신성분 등의 변수를 고르게 분포시켜야 한다.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의 포화 상태까지 사례를 늘려 검증을 지속하는 근거이론에서 ‘이론적 포

1) 양적 방법론의 견지에서 ‘타당도’는 검증이 정확하고 타당한가(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에 주목함), ‘신뢰도’는 사례의 확장에서도 검증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가와 관련된다. 질적 연구는 신뢰도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며 주로 개념적 이론화와 낮은 수준의 일반화를 중심으로 타당도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관련성과 시계열적 조건 및 제3변수의 통제를 가정하는 것일 때 질적 연구는 이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질적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일반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실험 방법과 제3변수의 통제를 초보적인 수준에서 응용해 보아야 한다.

화'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적 연구의 요소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획일화된 양적 연구에 반발하여 등장한 근거이론이 양적 연구의 장점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거이론 역시 제3변수를 도입하는 변수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 개념, 범주들의 구성, 유형화, 재구성을 통해 이론을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 고유의 특성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 한 사례를 넘어 다른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변이와 이를 구체화하는 유형화 작업 역시 이러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이희영, 2005: 143).

이론적 표집, 이론적 포화, 반복적 비교, 범주화, 이론 생성을 추구하는 근거이론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례 수를 바탕으로 자료의 코딩과 재구성을 통한 범주화와 세부적인 유형적 비교를 통해 분석적 귀납의 방식에서 이론을 생성한다(Charmaz, 2001). 그러나 이를 넘어서 사례 수 증가와 유사실험적 방법을 통해 제3의 변수들을 통제하는 인과관계 검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역시 어느 정도 연구자의 경험적 직관과 의도적 고려에 의해 제3변수를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의 제3변수 통제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 성찰적 재현의 문제

분석의 일반화에 이어 탈북자 면접을 활용하는 질적 연구에서 '성찰성'(reflexivity)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대상자의 상호주관적인(intersubjective) 관계에 기초한다. 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활용하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대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연구 대상자가 구성한 의미, 의식, 의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재현'(representation)의 과정이 중요하다(Emerson, 2001: 20). 질적 연구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것이 연구의 성찰적 일반성을 강화시킨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기술지(ethnography) 등 질적 연구는 '원주민화'(go native)의 오랜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참여자와 관찰자 사이에 놓이는 연구자의 딜레마에 관한 것이며 사료와 면접 자료를 '기록화'하는 문화 아카이빙의 구축과 분석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론적 일반화를 강조하는 현대의 질적 방법론에서도 관찰자의 위치를 강조하는 '근거이론'과 참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례확장방법'(extended case method)이 대비되고 있다. 근거이론과 달리 사례확장방법은 관찰자에서 참여자로의 확장, 관찰의 시공간적 확장 및 미시적인 내부과정의 거시적인 구조로의 확장을 통해 미시를 통한 거시의 이론적 재구성을 추구한다(Burawoy, 1998: 16-22).

한 사례에서 실제(reality)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관한 성찰성의 문제에 대해 참여자로서의 연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르디외(Bourdieu, 2000: 614)는 연구 대상자와의 일체된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면접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강조한다.²⁾ 탈북자 면접에서도 '라포'(rapport) 형성을 통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들의 비정상적인 경험과 기억을 재현

2) '살았던 생애사'(a life as lived), '이야기된 생애사'(a life as told), '체험된 생애사'(a life as experienced)를 재구성하는 생애사 방법(이희영, 2005)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해와 설명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연구자가 응답자들과 일체가 되는 정신적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자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설명을 유보하는 현상학적 관점과 대상자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추체험’의 해석학적 관점이 요구되는 것이다(유기웅 외, 2022: 29, 61). 대상자와의 합일을 통해 ‘이해가 곧 설명이 된다’는 부르디외(Bourdieu, 2000: 613)의 주장은 연구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현상학적 이해, 추체험 및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불완전하거나 오염된 이해는 물론 이해와 설명을 분리하는 논리를 배격하며 연구자와 대상자의 상호주관적 관계의 합일에서 이해가 설명이 되는 ‘성찰적인 성찰성’(reflexive reflexivity)을 추구하는 것이다(Bourdieu, 2000: 608).

그러나 대상자와 합일되는 성찰적인 성찰성은 다양한 대상자 및 사례의 비교와 유형화 즉 이론적 일반화에서 난관에 부딪힌다.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대상자들이 서로 다르게 구성한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재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유기웅, 2022: 11). 여러 성찰적 재현 결과들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자의 역할은 부르디외가 경계하고자 했던 전지전능한 관찰자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질적 방법론은 다시 대표성과 일반화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IV. 북한문화 아카이빙

북한 연구에서 전체 주민의 의식과 대응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양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념적인 공적 자료 속에 은폐된 주민들의 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더욱이 파편화된 탈북자 면접 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김일성 시대를 살았던 응답자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과거의 역사문화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북한학과 통일학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라져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아카이브화 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이들의 삶과 정체성을 이들이 경험했던 문화와 일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이것을 역사와 체제 속에서 분석하는 북한문화 아카이빙이 모색될 수 있다.

북한문화 아카이빙은 북한의 일상생활과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적 기억과 경험적 자료를 기록화하는 것이다(설문원, 2020). 북한의 원전 텍스트 및 일상의 경험 자료를 수집하는 어려움과 함께 김일성 시대를 경험한 대상자들의 소멸로 인한 보존 필요성, 일상생활의 기억 왜곡과 첨예한 갈등적 사실의 교차 검증을 위한 다양한 사례 수집의 필요성 및 역사적 사회문화 변동을 추적하는 장기적 자료 축적의 필요성에서 문화 아카이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먼저 북한문화 아카이브는 공적 기관의 기록물과 함께 개인들의 일기, 비망록, 수기, 메모 등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당대의 문화적 일상을 경험한 개인들의 면접 자료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북한문화 아카이빙에서는 면접을 통한 자료가 우선시 되며 면접을 통해 사료를 추가로 획득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문화 아카이빙은 단순한 기록학의 범위를 넘어 두터운 기술의 질적 방법론과 결합하여 일상과 구조,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는 장기적인 사회변동을 분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료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일상을 체험한 주민들의 목소리(현상/체험에 대한 이해와 관점)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해야 한다.

통제된 서사와 프레임을 극복하고 다양한 생활문화와 주민들의 일상을 담는 통시적인 기록화를 추구해야 하며 개인 체험의 기록과 활용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접 방법의 성찰성과 검증 방법의 다각화 등 질적 방법론의 확장된 적용이 필요하다. 주로 근거이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의 투명성과 방대한 아카이빙 자료의 분류 및 개방적 활용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 1994.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28: 318-342.
- 강진웅. 2015. “북한연구와 질적방법론의 활용,” 『아세아연구』 58(1): 66-85.
- 권현익·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창비.
- 김병로 외. 2022.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 김학재 외. 2021.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남북하나재단. 2022a.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_____. 2022b.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 박순성·홍민 편. 2010.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한울.
- 서대숙. 2001. 『북한현대사 문헌연구』. 백산서당.
- _____. 2004.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1권 조선노동당).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송두울. 1988.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8년 12월호: 104-116.
- 스즈키 마야유키. 1994.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역. 중앙일보사.
- 안병영. 1977.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3(1): 145-148.
- 양호민 외. 1975. “북한연구의 학적 체계와 방법적 성찰,” 『북한』 44: 102-114.
- 설문원. 2020. “북한의 일상생활과 ‘문화 아카이빙,’” 『기록학연구』 65: 321-363.
-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2001. 『북한 여성들의 삶과 꿈』. 여성한국사회연구소.
- 오창은. 2018. “북한 연구에서 북한 문화연구로,” 『문화과학』 96: 38-56
- 와다 하루끼. 2002. 『북조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동만·남기정 역. 돌베개.
- 유기웅 외. 202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 이명영. 1974. 『김일성 열전』. 신문화사.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이태섭. 2001. 『김일성 리더십연구』. 들녘.
- 이향규. 2001.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 선인.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조정아 외. 2010.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 좋은벗들. 2000.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정도출판.
- 차문석. 2008. “북한 노동 일상의 세계와 접근방법,” 『현대북한연구』 11(3): 155-197.

- 최동철 외. 20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고급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 한홍구. 2003. 『대한민국사』 (2권). 한겨레신문사.
- 허동찬. 1987. 『김일성 평전: 허구와 실상』. 북한문제연구소.
- 황성모. 1977. “북한연구 논고: 이해사회학적 방법론 시론,” 『통일정책』 3(2): 131-148.
- Bourdieu, Pierre. 2000. “Understanding,” pp. 607-626 in Pierre Bourdieu et al., *The Weight of the World: Social Suffering in Contemporary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urawoy, Michael. 1998. “The Extended Case Method,” *Sociological Theory* 16(1): 4-33.
- Cha, Victor. 2012.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Charmaz, Kathy. 2001. “Grounded Theory,” 335-352 in Robert M. Emerson ed., *Contemporary Filed Research: Perspectives and Formulations*, 2nd edition.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Press.
- Chomsky, Noam. 2000. *Rogue States: The Rule of Force in World Affairs*. South End Press.
- Cumings, Bruce. 1997.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Inc.
- Emerson, Robert M. 2001. *Contemporary Filed Research: Perspectives and Formulations*, 2nd edition.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Press, Inc.
- Lankov, Andrei. 2002. “Kim Takes Control: The ‘Great Purge’ in North Korea, 1956-1960,” *Korean Studies* 26(1): 87-119.
- Lee, Mun-Woong. 1975.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A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Ph.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Press.
- Maynes, Mary Jo, Jennifer L. Pierce, and Barbara Laslett. 2008. *Telling Stories: The Use of Personal Narratives in the Social Sciences and Histo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cCormack, Gavan. 1993.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198: 22-49.
- _____. 2002. “North Korea in the Vice,” *New Left Review* 18: 5-27.
- Oh, Kongdan and Ralph C. Hassig. 2000.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ion Press
- Park, Han S. 2002. *North Korea: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Boulder a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

통일시대 북한학의 방법과 과제

토론: 임수진(통일평화연구원)

통일시대 북한학의 방법과 과제 토론문

임수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본 논의는 통시적인 차원에서 북한연구방법론의 변화·발전의 역사를 설명하는 한편, 북한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 각각에서 논의되는 현대적 차원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함께 설명하였다. 시대적으로 각각의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던 이유와,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자성적인 비판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역량 변화 및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연구방법이 발전하고 변화한 역사를 상세히 분류·정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연구는 논의된 바와 같이 체제경쟁 및 이념 갈등 속 악마화된 전체주의 국가의 프레임 속에서 수행된 경향이 있었다. 적대적 이념 갈등 속에서 낙후된 체제를 증명하는 연역적 인식론에 따라 연구가 설계되고 제한된 자료를 통해 분석이 수행되었던 북한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엄정성에 대한 비판적 회고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와 갈망 속 북한 사회에 대한 ‘내재적’ 연구방법이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북한을 적대적 타자가 아닌 중립적 연구대상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진일보한 학술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사실 방법론으로서 북한사회 내재론은 혁신적인 연구방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학술적 가치중립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요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연구가 방법론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 대량 유입된 탈북민들 덕택이었다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공적문헌을 통한 문헌분석에 제한되어 수행되었던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는 탈북민들에 대한 대량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등을 통해 공적공간-사적공간, 풀뿌리적 차원의 일상생활세계-정치엘리트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정치사회구조의 계획과 구상 등의 격차를 확인하며 양적 및 질적인 교차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연구에서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성과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된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역시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대량 유입에 따른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북한연구의 질적 제고는 연구자들의 지적 전환이었다기보다 확장된 일차자료의 보유, 즉 연구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리하면, 북한연구방법론에서 일차적 변혁은 연구자들의 인식론적 전환, 즉 이데올로기화된 이념적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해 연구자적 객관성(가치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자성적 성찰에 따른 것이었던 데에 반하여, 이차적 변혁은 1990년대 탈북민 유입, 북한문헌의 공개 등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2000년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도된 여러 연구방법론들은 다수의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북한연구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희소성’에 관한 고질적 문제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내포한다. 본문에서 논의된 ‘일반성’의 문제가 이에서 파생된다. 통일평화연구원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비판 중의 하나 역시 이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탈북민 조사를 통한 북한사회 분석은 탈북민 자체의 집단적 특성, 즉 지역성, 젠더, 연령 등에 있어 북한사회의 표본집단으로서 여러 집단적 특성을 왜곡할 수 있는 한계를 상징하고 수행된다. 통일평화연구원

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하면, 2008년 이후 지속된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엄밀히 말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북한사회 '변화'의 이슈들을 특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동시대적인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일반화된 특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그 대안으로서 본문에서 논의된 근거이론을 고려해보면, 우선적으로 비교적 소수의 연구대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데에 큰 장점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북한이탈주민 조사, 특히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조사에 적용하면, 연구원의 주요 연구대상은 탈북한 지 1년 미만의 직행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관한 분석의 '축 설정'에 있어 귀납적 방법을 통해 연구모형을 설계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주지하듯 본원의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는 실증적이고 경험적 차원에서 북한사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계량분석을 지향한다 할 수 있으나, 대표성의 문제로 인해 그 해석에 있어서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성찰적 재현'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밖에 없음을 논할 수 있다.

'성찰적 재현'은 어휘 자체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데이터에 대한 해석 및 분석 능력, 즉 연구자의 연구 숙련도와 개인이 이미 보유한 연구대상에 관한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근거이론 역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결합을 통해 선행이론의 기계적인 경험적 검증의 한계와, 연구자의 주관적 성찰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이상적인 혼합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결국 근거이론을 제안한 Glaser와 Strauss가 후에 결별한 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역시 연구자의 주관적 사고 개입의 문제, '성찰적 재현'에 관한 중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계 극복 차원에서 일반화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적 재고가 다시 필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연구에서 방법론적으로 고려할 때 핵심이 되는 문제는 large N의 지속적인(또는 효과적인) 확장이라 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를 고려할 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구사례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는 시간적 변화를 감안하며 동일한 연구질문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사례를 확장시키는 방안을 지속 수행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적 차원에서 볼 때, 대북제재, 코로나 등으로 북한의 국경 봉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 수가 극히 감소하며, 이와 같은 표본집단수의 확장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논할 수 있다. 본문에서 논의한 근거이론방법이나 사례확장방법 모두 결과적으로는 기초자료, 즉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극소수만이 유입되어 연구대상에 대한 선택의 여지 자체가 소멸되어,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경험적 분석 자체마저 불가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실정치 속 남북관계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다시 고려하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북한연구는 많은 부분 북한 원전을 통한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등에 대체로 의존된 상태로 정체된 경향이 있었다고 논할 수 있다. 이를 따라 볼 때, 현 시대를 환경적 변화 등에 따른 연구대상의 제약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대안적 차원의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논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변혁(first wave)이 연구자들의 인식론적 자각, 두 번째 변혁(second wave)이 일차 연구자료의 확대라는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면, 현 시대 북한연구에서 제기되는 여러 방법론적 제약들이 북한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적 변혁의 동기로서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여러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텍스트 분석 차원에서 문헌연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료의 시계열적 축적으로 인해 확장된 N을 중심으로 한 세분화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계량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발표자께서 논의하신 축적된 자료의 체계적 정리

와 기록은 현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논할 수 있다. 그러나 분절적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확보되고 가공된 자료들이 대량 통합될 때 불거질 수 있는 윤리적 안정성과 안보의 문제, 정치적 민감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논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규모 아카이빙의 필요성은 분명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론적 취약성 등에 따른 연구자료로서의 윤리적, 정치·사회문화적 한계가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안이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셋의 분석이 가능해진 현대연구방법론의 발전 속에서, 안보 등의 이유로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심지어 퇴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현 시대 북한연구자료의 제약을 고려할 때, 북한연구자들의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지적 또는 인식론적 환기와 방법론적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시점에서 북한연구자들이 구상할 수 있는 대안적 차원의 연구 대상의 확장과 방법론적 모색에 있어 주요하게 논할 수 있는 현실적 차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한중관계의 지정학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발표: 이지영(American Univ)

한중관계의 지정학: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이지영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2023년 5월 19일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은 국제정치가 안정적이면 잠재화
되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열강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국제질서가 혼란에 빠질 때 그 진정한 가치가
현재화 되는 것이다.”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Today

- 중국과 한반도 – “순망치한”

-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중관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어떤 양상을 띠게 될 것인가?
- 또한 이것이 한미동맹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1. 지정학적 접근이란?

“... the study of the way a country’s size, position, etc. influence its power and its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Cambridge Dictionary

Geopolitical Vision

“any idea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one’s own and other places, involving feelings of (in)security or (dis)advantage (and/or) invoking ideas about a collective mission or foreign policy strategy”

Gertjan Dijkink



2. 한중관계의 역사 속 지정학

-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들



My argument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geopolitical vision

→ defensively oriented as long as
there was a means of control

▪ “순망치한”

*At times of great power competition
over the Korea Peninsula*

→ political interference and
military intervention as a means to
restore *the status quo ante vis-à-vis*
other great powers



3. 오늘날 미·중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볼 때

중국과 미국 각각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고려 -
한국에 대한 전략적 목표 내지는 기대는 (aims and expectations)?



Korea's place in U.S.-China competition

미국

- 한미동맹: 북한
-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제 →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
전개, 투자
-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중국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의
대미정책에 따른 종속변수
- 아시아에 주둔 하는 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들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반대
- ← 사드 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4. Security Trilemma와 한국 외교정책

아시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security trilemma”

- 한미동맹의 북한에 대한 억제강화 조처들이 한국,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상황

Linton Brooks and Mira Rapp-Hooper, *Strategic Asia 2013-14*



What THAAD case foresaw ...

U.S. Indo-Pacific Strategy와 한미동맹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강화를 regionalized하는 전략에 기인한 THAAD 배치

← the U.S.' goals and aims: Asian alliances into a networked, regionalized deterrence structure

중국과 한미동맹

-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force multiplier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

← 경제력의 전략적 이용 (economic coercion)

- 대미정책 추구의 일환으로 북한과 정치적인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 노력 (a form of insurance policy)



5 phases of Beijing-Seoul ties

1. 1950–1992 From War to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2. 1992–2008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Honeymoon, and Deepening Suspicion
 - 한중이 양국관계를 정치적,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려 한 시도들
3. 2008–2013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nd Disappointments
 -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음
4. 2013–2020 The Military Parade, THAAD, and the ‘Three Nos’
5. 2022-present No to the ‘Three Nos’ and Search for New Equilibrium



5. 오늘날 한중관계와 한미동맹 : changing assumptions

미국의 대중정책은 변화 – 한국의 대중정책은?
→ 이것이 한미동맹에 시사하는 바

중국의 증대하는 영향력과 한미동맹의
“Alliance Halo” 문제

intra-Asian security partnerships이 강화되는
추세

→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노력은? (i.e.
한일관계)



한미동맹 management: 3가지 어려운 문제

1).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i.e. Korea's response to the U.S.' ban on Huawei)



2). 최근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요소 중 상당부분이 비전통적 안보문제인 점을 고려할 때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e. cyber attacks, disinformation campaigns, and economic coercion) 이를 대처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은?



3). 한국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미 동맹과의 보조는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



6. Recommendations

drawing on Ji-Young Lee, *Strategic Asia 2020*

- South Korean society as a whole should develop a vision for its place in the newly emerging international order and carefully examine its strategic priorities in the face of U.S.-China competition.
- Washington should not force a choice but should instead help empower Seoul politically to deal with Beijing's increasing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emphasize the alliance's political, as opposed to military, value in shap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At the same time, they must continually communicate what this alliance is and is not with China.



감사합니다 -





3

한중관계의 지정학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토론: 마상윤(가톨릭대학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회의 (2023. 5. 19)

이지영 교수의 “한중관계의 지정학” 발제에 대한 토론

마상윤 (가톨릭대)

1.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 연속성과 변화
 - 발표자는 지정학적 연속성을 전제하고 있는듯함. 그러나 중국 중심 전통질서는 서세동점 이후의 질서 특히 미국 패권 질서와 큰 차이 있음.
 - 오늘날의 북·중 관계에서처럼 전통질서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는지 의문임. “At times of strategic competi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라고 했는데, 그러한 경우는 사실 드물었다고 생각됨. 중국과 세계질서의 중심을 다투는 세력은 없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반도를 일종의 완충지대로 여길 필요가 없었음.
 - 물론 임진왜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음. 일본이 중국을 정벌하기 위한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요구했던 사례이며, 명은 일본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조선에 지원군을 파견. 하지만 이는 동아시아 전통질서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2. Security Trilemma?
 - Trilemma
 1. a situation in which a difficult choice has to be made between three alternatives, especially when these are equally undesirable.
 2. Specifically, the trilemma means that a country can follow only two of three policies at once: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fixed exchange rates, and discretionary domestic monetary policy.
 - “한국과 미국의 대북억제강화가 한·미와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왜 trilemma인가? trilemma를 구성하는 세 개의 대안(alternatives)이나 정책(policies)은 무엇인가?

3. 한중관계의 5단계
 - 제1단계(1950-1992)에서 보다 세부적인 시기 구분이 가능함. 1970년대 초부터 한국의 북방지역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말 국제적 해빙의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북방정책이 추진되었음. 그 결과로 한중수교(1992)가 이루어졌음.

4. THAAD 배치

- THAAD 배치(2016)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강화를 regionalized하는 전략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는데, 미국이 지역화 의도를 가졌을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그렇게 확인한 바는 없음. 한국은 분명히 대북 억제의 지역화 의도가 없었음.

5. “Stronger intra-Asian security partnership”

- 일본과 호주뿐 아니라 인도와 ASEAN을 포함했는데, 인도와 ASEAN은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및 호주와도 상당히 다른 이해관계와 목적을 지님.
- 이들은 hedging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

6. 한국의 전략에 관한 hard questions

- 미·중 경제적 decoupling? 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4.27일 브루킹스 연설에서 (EU의 von Leyden 총재가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decoupling이 아니라 de-risking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와 engagement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한국의 대중전략도 de-risking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역할?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담겨있듯 경제,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등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 또한, 경제협력 관련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rare earth materials/critical minerals의 대안 공급처를 개발하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도움으로써 국제적 압박의 강도를 희석해서 약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도 충분히 유의할 필요 있음. 이러한 부정적 역할을 방지하고 대신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중 경쟁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경쟁의 대상에서 분리하는 합의를 포함한 ‘제도화’가 우선하여 필요함.

7. 한미동맹의 군사적 가치보다 정치적 가치를 더 강조하여야 한다는 제안

- 이 제안은 정치 동맹화를 의미하는지 궁금. 이는 확장억제 강화 등 동맹의 군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와 부합하지 않음.
- 정치동맹의 성격이 강조된다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이 축소되고,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임. /끝/